정보통신망의 사용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하며, 이는 통신기반의 확충과 운영기금으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3. 민주적인 통신공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 발달한 디지탈통신기술에 기반한 쌍방적/직접적 의사소통과정이 공동체 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실제적 힘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통신공간에서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완전하게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형태의 정보 검열에도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보장을 위한 암호화기술의 공개를 주장합니다.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계획 및 운영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정책참여 보장 을 주장합니다.

4. 정보독점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활동을 고민합니다.

- 다국적기업 및 기술선진국들의 이익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세계정보 흐름의 질서는 전지구적 협력의 차원에서 재편되어야 합니다.

일국의 배타적 이익이 아닌 전세계적 공공이익을 위한 각국의 정보생산 자들의 연대를 촉구합니다.

성, 환경, 인종 문제에 대한 진보적 입장을 국제적 흐름으로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외진보단체의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진보단체의 통신이용을 지원합니다.

■ 참세상 "통신연대"

진보통신단체 연대의 필요성에 의해 결성

1) 참세상 비비에스 (go jinbo)

2) 구성단체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하이텔 / barun)
- 정보연대 SING (http://power1.snu.ac.kr:8080/)
- 참세상 (참세상)
- 진보청년통신동우회 (나우누리/ ssociety 5)
- 찬우물 (나우누리/ cw)
- 한과청 인터넷소모임 (http://www.ink.co.kr/~komsat)
- 현대철학동호회 (천리안 / pt)
- 희망터 (천리안 / pp)

이 중, 바통모와 SING, 참세상, 한과청은 진보운동방향 정보사회의 본질문제에 접근하여 운동하고 있으며, 현철동과 희망터는 반정부 투쟁활동을 통신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찬우물은 아직 중도 입장으로 보여지나 최근 토론 양상을 봐서는 전자의 노선을 향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고로 새로 발족한 통신연대 게시판의 모양과 최근 활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활동일지 :

1995년 9월6일 참세상BBS에 전용게시판 개통

10월1일 첫 공식 모임 (칸타타에서)

10월2일 5.18 특별법제정 위한 통신서명운동 시작

10월14일 5.18 인터넷 서명 시작

10월17일 "통신연대"로 약어 결정

10월21일 대학신보와 인터뷰를 통해 오프라인홍보 및 활동 시작. 바통모 전 대표시습 장여경 양이 임시 대표로 게시판 관리와 대외 활동 중.

■ 인터넷의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모임

인터넷 : http://kpd.sing-kr.org/komsat

참세상 비비에스의 한과청 비비에스

1) 참세상 비비에스 (go komsat)

2) 모임소개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조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비비에스 개설
- 초기 과학기술관련 DB구축과 회원들간의 우호를 위해 진행되었으나 현재 활동이 극히 미비

■ Web기획팀

현재 작업실에 랜망을 구축하였다. 그 네트워크를 3월내로 56K 전용선으로 인터넷과 연결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Web Server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고, SING Web Page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다. 3월부터 2주간격으로 정기적인 내용갱신을 할 예정이다.

상반기중에 SING웹 서버에 실릴 웹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연대 SING

정보연대 SING의 웹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연대 SING의 역사, 강령, 회원소개등 SING에 관한 정보
* HTML, Java, VRML 등을 포함하여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제반 사항
* BSD, Linux 등의 시스템과 MAJORDOMO등 인터넷관련 서비스 설치 방법
* Windows와 Unix에서 한글처리문제
* 한국의 정보통신 환경과 정책에 대한 조사, 내용, 제안 (예: 01410유료화, 한국통신 민영화 등)
* 정보연대 SING의 활동과 제안 (예: SING MAIL SERVER, Korea Progressive Directory 소개, 통신연대 월례포럼 등)
* SING 통신회원 BBS

SING웹페이지는 2월 1일을 기해서 "http://power1.snu.ac.kr:8080/"에서 "http://superbear.snu.ac.kr/"으로 옮겨 새롭게 오픈 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2주에 한 번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ING 통신회원에 대한 소개와 제안은 아마 다음호에 자세히 나갈 것 같습니다.

- Korea Progressive Directory

한국의 진보단체들의 웹페이지를 올려 드립니다. 단지 웹페이지만이 아니라, 메일링리스트, 게시판 등을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단체들의 연대를 실현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소개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Social Science Network

웹페이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책이 서점에 있는 지 확인해보고, 주문까지 할 수 있다면! 서울대앞의 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을 시작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책을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 서점 네트워크를 상반기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나온 책 소개, 서평모음, 사회과학 관련 메일링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어서 사회과학 네트워크로 확대할 것입니다.

- Korea Internet Catalog

현재 한국의 웹사이트를 정리해 놓은 곳은 동국대, 충남대등 많은 곳이 있다. 그리고, 한글서치엔진 또한 개발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Yahoo'만큼 찾기쉽고 잘 정리된 곳은 없는 현실이다. 3월 15일까지 SING 웹페이지나 서버에서 Korea Internet Catalog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 또는 한국과 관련된 - 웹사이트, 메일링리스트, 뉴스그룹, FTP사이트를 자세히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업데이트되도록 운영할 것이다.

작년부터 웹서버를 운영하면서 영어화 해달라는 메일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어학능력이 부족하여 새롭게 개정된 강령, 역사, 활동소개만이 이번에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일본어판 강령도 이번에 올라갈 것이다.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든다. 나머지 글들은 느리더라도 능력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영어화 할 것이다.

'너무나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웹페이지를 개설한 후, 주기적인 내용갱신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한 번 지켜봐 달라는 말로 이글을 맺는다.

■ 기술팀

SING의 기술팀은 정보의 공유라는 대전제를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훌륭한 정보를 창출하고 다시 이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화시키는 활동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목적하에 현재 기술팀이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다.

- Copyleft Program 개발

개인적으로 GNU가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협동작업이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것은 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훌륭한 정보와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구체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SING 기술팀의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술팀의 프로그램개발 프로젝트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기술팀의 역량을 고려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분간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서 Open domain상의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하고 사용하기 쉽게하여 배포하는 정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한 계획하의 첫번째 프로젝트는 X용 한글 Editor의 제작이다. X용

한글 Editor를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겠지만, 현재 Open Domain상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조합하여 사용하기 쉽게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같은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상의 최신 Topic에 대한 소개

FAQ나 최신 Topic에 대한 문서를 한글화하고 이를 Sing a Song에 개재하여 알리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최신 Topic에 대해서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ing a Song 2호부터 한 두편 정도의 글을 올릴 계획이다.

- 문서의 DB화

SING의 Internet Server가 구축되고 SING의 홈페이지가 제작되면, SING의 홈페이지의 일부분으로서 기술팀 홈페이지가 제작될 것이다. 기술팀 홈페이지는 현재 Internet상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DB와 하여,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SING의 Internet Server가 구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지만, Server가구축되는 대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상이 현재 SING 기술팀이 계획하고 있는 활동 방향이다. 하지만, 현재 기술팀의 인원과 역량으로 볼 때 쉽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같이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항상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3. 01410 유료화 반대 투쟁과정과 그 의미

작년 말에 이루어진 기습적인 01410 패킷망에 대한 요금부과는 통신유저들의 광범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분노를 조직화했던 대책회의의 성립은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만 한 것 같다. 01410 유료화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처음의 즉자적인 반발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통신기반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가, 앞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갈 정보통신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통신망에서의 광범한 서명운동과 자발적인 대책회의로의 결집은 이후 통신운동의 방향을 가늠하는 많은 단초를 던져주었던 것 같다. 일단 한국통신이유료화 연기를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사건이 단지 통신요금인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긴 호흡으로 다시 시작할 때이다. 이에대책회의에서 각 통신망에 게시판을 마련하고, 반대의 조직화를 넘어 올바른 대안을 연구, 마련할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정보연대도 대책회의의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통신인프라구축을 위한 대안의 마련에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에 이번 SING A SONG Vol.1 #1에서는 기간의 경과와 그 의미를 반성, 정리해보고, 향후 발간될 SING A SONG을 통해 국내외의 통신기반과 정보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적 입장을 마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며, 대책회의 등 여타 통신단체들과 토론해나갔으면 한다. 그간에 일어났던 분노와 투쟁의 느낌들을 여건상 담아내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

2.3.1. 01410 유료화 및 반대투쟁 경과

2.3.1.1. 한국통신 01410 패킷접속료 부과 발표

HiNET-P 서비스 대폭확대 제공

-256kbps ~ 2,048kbps 까지의 Host 고속도전용선 서비스 제공
-기본요금이 기존의 50% 수준인 2선식전용선 서비스 제공

한국통신은 '95.12.1일 누터 공중패킷통신망인 HiNET-P에 기본요금이 기존의 50% 수준인 2선식 전용서비스와 고속도급 전용선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서비스 선택폭을 넓혀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고속화되고 있는 PC통신 이용환경에 적극 부흥하는 등 이용자 편익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2선식전용선서비스 신설
[2선식전용서비스]란 4선식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기존 공중패킷망 전용선 서비스(L/L)와 똑같이 전이중방식(Full Duplex)으로 통신을 하면서도 선로 비가 저렴한 2선식전용회선을 사용함으로써 기본료가 4선식에 비해 50% 저 렴한 서비스입니다.

%% 고속도전용서비스 신설
[고속도전용서비스]는 정보를 이용하는 단말기의 통신환경이 14.4kbps, 2 8.8kbps로 급격히 고속화됨에 따라 기존 패킷망에서 제공되는 56/64kbps
이하의 Host회선에 발생하는 효율성 저하, 데이터전송지연, 통신비용의 증 가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56kbps,512kbps,1,024kbps,1,544kbps, 2,04
8kbps의 고속접속기능을 추가한 서비스로서, 1,544kbps의 경우 56/64kbps에 비해 속도비는 24배 인데 비해 기본요금은 9배 수준인 3,400,000원으로
저렴합니다.

%% 다이얼업(D/U) 접속료 인하

소량의 데이터통신을 주로하는 사업자의 통신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이얼업(D/U)접속료를 분당 18원에서 5.09원으로, 특수호출서비스 접속료를 분당 21원에서 8원으로 대폭 인하 하였습니다.

%% 다량이용자 할인대상 확대

전용D/U포트이용자에 한하여 적용해오던 다량이용자 할인대상을 전체 이용자로 확대 적용하며 적용효율은 51-100가입은 10%, 101-301가입은 13%, 301가입이상은 16%의 기본료 또는 정액요금을 할인합니다.

%% 프레임릴레이서비스 (HINET-F)의 HINET-P에 통합

데이터통신방식이 유사하고 동일한 패킷교환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별개의 이용약관으로 운용하고 있는 HINET-F를 HINET-P에 통합하여 프레임릴레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도 HINET-P에 청약하면 됩니다.

%% 정보이용료 회수대행서비스 실시

[회수대행서비스]란 한국통신이 정보제공자(IP,SP)를 대신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주

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료의 10%를 회수대행수수료로 받는 제도로서,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이용자는 개별 ID없이 각종 DB를 손쉽게 접속할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해지며 정보제공는 각종 고급정보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어 이용자, Network 그리고 DB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HiTEL이용자에게 패킷접속료 부과('96. 1. 1일 부터)

국,내외 정보통신시장의 완전 개방과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정보통신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적용를 보류하여 오던 PC통신 이용자의 패킷통신망 접속료를 부득히 199b년 1월 1일 부터 데이터량에 관계없이 접속시간에 따라 분당 3원씩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PC통신 이용자가 HiNET-P에 가입하지 않고 '01410'번을 다이얼링한후 HiNET-P의 선택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DB를 접속하는 경우의 패킷망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 이용시간대인 21:00~07:00사이에는 50%할인(분당 1.5원)하며, 장시간 이용하는 PC통신 매니어를 위해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전화요금과 패킷접속료를 포함하여 월10여만원 정도의 정액서비스를 '96년 상반기 중 제공할 예정입니다.

%% 주요 변경요금

1. 기본료

구 분	기본요금 4선식	기본요금 2선식	가상사설망 4선식	정액요금 2선식	비 고
D/U	4,700		-		
L/L 1.2kbps	66,000	-	190,000	-	
2.4kbps	76,000	34,000	218,000	82,000	
4.8kbps	95,000	42,000	247,300	107,000	
9.6kbps	123,000	53,999	275,000	146,000	
19.2kbps	-	64,000	-	200,000	
56/64kbps	380,000	-	950,000	-	
256kbps	960,000	-		-	
512kbps	1,490,000	-		-	
1,024kbps	2,460,000	-		-	
1,544kbps	3,400,000	-		-	
2,048kbps	4,450,000	-		-	(단위:원)

2. 사용료(D/U, L/L 동일)

구 분	접속료(분당)	전송료(seg당)	비 고
국 내	5.09원	0.28원	
국 제	104원	9.5원	

3. 확장서비스료

구 분	등록비	관리비	접속료	요금 부담자
특수호출	-	237,000/원	8원/분	특수호출신청자
선택화면제공	100,000	237,000/원	-	정보제공자(IP)
선택화면접속	-	-	3원/분	정보이용자

2.3.1.2. 01410에 대한 한국PC통신(주)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한국PC통신입니다.

저희 PC 통신은 92년5월 유료화이후 단 한 차례도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을 검토한 바 없으며 이용자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통신에서는 지난92년7월부터 무료로 제공해오던 01410패킷망사용료를 96년1월1일부터 유료화(3원/분)한다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통신망(DNS) 사용료를 이미 받고 있는 데이콤이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정통부의 지시로 약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동아일보 12월28일자)

또한 한국통신은 PC통신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패킷접속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패킷사용료의 부과에 따라 부담할 요금은 월2,700원(1일30분 이용자 기준)정도이며, 할인시간대에 이용할 경우는 50% 할인된 1,350원 정도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사는 자체망이 없으며 이용자 여러분의 통신요금이 어느 부분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킷망 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정부의 승인하에서 포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실줄 믿습니다.

통신료의 부과 또는 인상은 정보화 사회의 조기진입과 PC 통신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회사의 의견이며 통신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자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PC통신

2.3.1.3. 01410에 대한 (주)나우콤의 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주)나우콤입니다.

최근 한국통신은 01410패킷망(Hinet-P)에 96년 1월 1일부터 분당 3원의 접속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01410번을 통해 나우누리에 접속한 이용자들은 올 1월부터 하이넷-P 접속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01410이용자들은 3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 24원에서 최고 37원의 통신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추정요금/3분)

시간대별	기존이용요금	추가패킷요금	요금결과
21:00 - 07:00	19.6원(40원*0.49)	+ 4.5원(9원*0.5)	= 24.1원
07:00 - 08:00	19.6원(40원*0.49)	+ 6.3원(9원*0.7)	= 25.9원
08:00 - 09:00	28.0원(40원*0.70)	+ 6.3원(9원*0.7)	= 34.3원
09:00 - 19:00	28.0원(40원*0.70)	+ 9.0원(9원*1.0)	= 37.0원
19:00 - 21:00	28.0원(40원*0.70)	+ 6.3원(9원*0.7)	= 34.3원

* 위 요금은 이론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되는 요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이번 패킷망 요금 부과조치가 PC통신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패킷접속설비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통신망(DNS) 사용료를 이미 받고 있는 데이콤이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정통부의 지시로 약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수민간자본으로 풀뿌리통신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출발한(주)나우콤은 한국통신의 이러한 패킷통신요금 부과조치가 PC통신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성화와 정보화사회 실현에 또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나우콤은 통신요금이 현재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장 큰 장애로 여기고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패킷망요금 부과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고속전용노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역시 회선확보의 어려움은 있으나 이미 신사지역의 02-515-4777,5777 200 회선을 비롯, 02-517-6311 100회선을 28,800bps의 고속지원노드로 추가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전화국을 통해 올 하반기에 1,080회선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전주, 춘천, 부산, 마산, 울산, 진주 등 지방노드의 안정화와 고속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원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의 지방노드를 추가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우누리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자체데이터통신망 014XY의 조기개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014XY의 개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0:4XY중계회선요금 인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우리 그리고 함께하는 세상 나우누리

2.3.1.4. 01410 유료화 반대 촛불시위

박인환 (ssaico)

[안내] 01410 유료화 반대 촛불시위 12/31 03:19 23 line

안녕하십니까? 박인환입니다.

여러분 케텔시절의 '촛불시위'를 아십니까?

단지 촛불하나만으로, 통신인의 긍지와 의견을 말했던 촛불시위 이제 01410의 유료화로 다시한번 시도되려 하고 있습니다.

방법 : go conf(토론마당)의 952번 토론실에서, li ssaico로 촛불시위에 관련된 글을 보시고, '[동참]'이란 머릿말로 글을 올려주신뒤에, 나오시면

됩니다.

일자 : 바로 오늘(31일), 오후 8시

장소 : 광화문 (주)한국통신 본사사옥앞

지참물 : 초(2-3개), 플랫카드(만들어 오실분 환영), 약간의 다과정도

오늘 오후 8시로 하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내일(1일)부터 당장 유료화가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들이 광화문 일대로 집결하기 때문에(재야의 종 타종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위는 어느 누가 주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질 촛불시위는 아무런 말도, 폭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시커먼 밤에 그 밤을 비추어낼 자그마한 촛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생각은, 확실히 홍보될 수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3.1.5. 01410 반대 서명운동

박재석 (tong)

[충격!/집계] 01410 반대운동 전국강타! 01/08 11:52 64 line

충격!!!!!!!!!!!!! 서명인원 2500명 돌파!

하이텔 사상 최초, 최대 서명인원 기록!

이젠 국민의 소리를 무시못할 만큼의 규모로 서명운동 확산 조짐!

하이텔측의 게으르고도 무성의한 토론실 관리로 인해 서명운동에 지장을 많이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차례의 요구로 토론실이 정리가 되어 늦게 나마 현재 시각의 집계 상황을 올립니다.

1996년 1월 8일 09시 45분 현재 서명인원 집계 상황.

아래 서명인원 집계 상황 목록은 제목에 '서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만을 유효한것으로 가정 - 프로그래밍 됨. ('서멍','혈서'등의 오타등도 포함)

.....< 상 략 >.....

홍영기(hyki)	[서명]
김헌경(TRUTH)	[서명] 반대합니다.
정진영(*kgreat)	[서명] 어허 3원/분당

.....< 중 략 >.....

봉근행(72100)	[서명]절대로 /.....
배충희(KOONY)	[서명]서비스 개선없는 요금인상반대한다!

1996년 1월 8일 09시 45분 현재 총 서명 인원	:	2409 명
중복서명자 및 무효서명 수	:	90 개
꿈동산 회원 중 서명인원	:	67 명

결과값 = 2409 + 67 - 90 = 2386 명

위 결과값은 제목에 '서명' 또는 '서멍' 또는 '혈서'라는 3개의 단어중 하나가 들어간 게시물만을 집계한 것으로써, 제목에 위 3개의 단어가 안들어가고 내용상 '서명'이 들어간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 알파> 까지 한다면, 약 2500명 가량이 서명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집계는 서명운동이 마무리 되는 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해 주신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추가 사항

---

1. 주소기입 해 주세요.

2. 동호회를 중심으로 홍보해 주세요. 채팅실에서도 홍보. 머드게임중에도 홍보. 바둑 두다가도 홍보. 자료 Up/Down하다가도 홍보...음!
(자료 Up/Down 할때는 홍보가 불가능하지? 쩝.) 아무튼..적극 홍보!!

3. 13일 칸타타 모임, 20일 촛불시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go plaza 한 후, 'li shsgus' 또는 'lt 촛불' 참조!

4. 게시판 담당자는 융통성을 발휘해 이 게시물 삭제 하지 마세요.

= tong =

2.3.1.6. 01410 대책회의 구성

13일 01410 비상 대책회의 모임 보고 + 01/14 12:12 56 line

< 13 일 오후 3시, 대학로 쇠죽가마 01410 비상대책회의 정식모임 보고 >

가. 참석자 명단

박현정(워터루/나우누리)	월간 PC-LiNE
———	월간 PC 사랑
정규응	주간 내일신문
암승욱	한국통신데이터사업본부 영업국 과장
박준호(center10)	청년정보문화센터
민지숙(jetaim)	한국PC통신 홍보실
김종희(silvics)	한국PC통신 직원
최진석(nastyboy)	하이텔 플뿌리등호회 시삽

-하이텔

박진형(coolie) 신용수(CyberS) 강성구(foruser) 이재광(leesop) 장항배(chb83) 권은아(nouvell)
박주영(tion0) 최 준(backhaus) 이광흠(*osoh00) 김종희(sycics) 설원제(soj45019) 서진영(JINYOUNG)
최엄용(kingame) 조성현(bsan) 김수영(KK220) 송승한(mybabo) 이상기(infoland) 박인환(ssaico)
신만희(roxia) 김용섭(choojy) 이동영(4zero) 이으뜸(Kabbala) 정원석(adrian)

-천리안

김바로(jsbrk)

-나우누리

안유석(simulasi)

나. 논의 내용

- 정식 대표부 결성
- 결의안 확정
- 행동 방안 논의
- 촛불시위문제 논의 : 시기및 장소조정
- 자유토론 : 한국통신 임승욱 과장님의 개인적 참석으로, 일문일답 시간 마련및 한국통신측의 홍보물 배포

다. 앞으로의 일정

- 한국통신측이 배포한 홍보물 게시
- 01410 패킷사용료 부과에 관한 우리의 결의(홍보물 게시)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수집및 대화 요구

관심을 가져 주시고, 1차 비상대책회의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하고자 노력하는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

2.3.1.7. 01410 대책회의 결의문(01410 패킷망 접속료 부과에 관한 우리의 결의)

한국통신은 1월 1일부터 01410요금에 패킷망 접속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저렴한 데이타통신을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에 전혀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이다. 이용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또 한국통신은 마땅히 요금 변경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야 하나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 통신인들은 한국통신의 이러한 결정이 이용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PC통신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국통신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은 데이콤이 일반이용자들에게 패킷망 접속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국통신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이의제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PC통신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고, 눈앞의 기업이익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 데이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패킷망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데이타통신의 중요성을 망각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한다. 무릇 통신망은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지니며, 전 국민이 고루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위해 상업적 성격이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보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며, 온 국민이 누려야할 정보통신 서비스가 특정기업들의 황금시장이 되어서는 안됨을 경고한다.데이타통신은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그 특성에 맞는 고유한 요금체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비단 01410 사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신 전체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며,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온 통신인이 연합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여기에 온 국민의 관심과 모든 통신인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한국통신은 부당한 요금징수를 철회하라!

정보통신의 발전을 망각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데이콤은 각성하라!

통신망의 공공성을 인정하라!

데이타통신 요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라!

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라!

모든 통신인은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통신문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자!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

2.3.1.8. 1월 20일 결의대회 보고

[1월 20일 결의대회 보고]

오늘 1월 20일 5시 반부터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결의대회>> 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13일 대책회의 결성 과정과 이후 활동 보고, 요금체계에 대한 설명회, 결의문 낭독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참여한 이용자 분들의 결의를 밝히는 것으로 치뤄졌습니다.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 제주, 광주 등 지방에서 다른 분들을 대표하여 올라오신 분들과, 중고등학생을 비롯하여 40 여 명의 참여로 이루어진 오늘 행사는 한국통신에 대한 분노를 표출 하고, 대책회의에 대한 격려의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이텔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책회의에 배홍만님과 박소정님이 활동하시는 나우누리 대책회의도 결합하였으며, SING 등 정보관련 여러 이용자 단체들도 큰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대책회의와, 한국통신, 정보통신부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문서를 통해 여러 이용자분들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치뤄질 관계 기관에 공개질의서 발송, 그리고 공청회에 실제로 쓰일 자료로 이러한 공개질의 내용은 게시판을 통해 계속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성원해주신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참여, 그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이용자들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대책회의

2.3.1.9. 결의대회 중 경과보고 발표문[21)]

<< 01410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과 보고 >>

96년 새해벽두부터 하이텔을 비롯한 PC통신계는 한국통신의 01410 패킷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패킷망 사용료 부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성 글이 플라자에 올라오고, 이에 대한망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입장, 한국PC통신, 나우콤 등 01410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서비스 회사의 입장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윽고 01410 유료화를 반대하는 이용자 모임인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 가 결성되어 지난 일주일간의 대내외 언론홍보 활동, 한국통신 방문과 게시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의 진행과정을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5년 11월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데이콤의 불공정거래 이의제기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통신부는 유료화에 관한 01410 이용자 약관을 고쳤고, 이용자들에 의해 95년 12월 중순에서야 01410 패킷망 메뉴의 99번 <공지사항>란에 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짤막하게 언급되었음이알려졌습니다. 이는 마땅히 널리 알리어져야 할 정책홍보의 목적보다는 차후 이용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대비한 형식적인 대처에 불과할 뿐으로,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모호한 공지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우리 이용자들은 백만 이용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2월 28일 하이텔의 <go conf 952> 토론실에 강석중(WISEGUY)님이 (<<01410 접속료(?) 부과 누구 맘대로??>> 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박인환(ssaico)님이 12월 31일에 소규모나마 한차례 촛불시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20일(오늘) 예정이었던 촛불시위를 계획하여 왔습니다. 촛불시위가 잠정연기됨에 따라, 오늘 결의대회가 기획되기도 한 것이지요. 그 후, <01410 접속료 부과>에 대해 01410에 연결된 한국PC통신에서 12월 29일 처음으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지를 띄웠고 이어 나우누리가 1월 3일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하이텔 플라자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정보통신요금체계의 분석과 패킷망 사용료 부과체계의 부당성을 밝히는 글이 폭로되면서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논란에 불을 당깁니다. 이후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문제와 통신망을둘러싼 여러 기업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통신시장개방 압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장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이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96년 1월 13일 하이텔, 나우누리 이용자 총 4천 오백여명의 서명과 이날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50여 명의 지지를 받아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가 결성되고 결의문을 발표합니다.

그 때의 뜻을 받아 수정된 결의안이 잠시 후 낭독될 것입니다.

지금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는 PC통신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PC통신 이용자들의 참여를 무시하는 한국통신 및사업자들의 논리에 맞서 폭로 활동과 여러 언론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자의 목소리가 실리도록 한국통신 및 각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낼 공개질의서와 공청회를 기획 중입니다. 이 부분은 하동연(하이텔 동호회 연합회)의 방향이 정해지면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애석하게 가지지 못한 촛불시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싸움을 성공적으로 이끌게되면 승리를 축하하는 축하대회, 혹은 촛불잔치에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숨이 깃든 더 화려한 경과보고는 물론이고, 이제 태동하는 통신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칩니다

2.3.1.10. 한국통신의 01410 접속료 부과 연기 공지

1. 저희 한국통신은 당초 96. 1. 1 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패킷사용료(3원/분)의 시행시기를 96년 하반기로 연기합니다.
2. 패킷사용료 부과시기를 연기하게 된 것은 PC통신 이용자의 주요 불만사항이 PC통신 품질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PC통신망의 품질이 개선될 때까지 패킷사용료의 부과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한것입니다.
3. PC통신 품질저하에 관계되는 요소는 패킷망, 패킷망에 연결된 DB접속회선, DB 시스템 용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통신의 '96년 하반기중 품질개선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96/01/20 지난 토요일 결의대회중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가. 패킷망

ㅇ 한국통신은 전국 군 단위까지 212지역에 패킷교환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패킷교환기간을 연결하는 회선(중계회선)의 용량에 따라 통신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통신의 패킷망은 이미 주요 9개 대도시간은 45Mbps, 대부분의 중계회선은 1.544Mbps로 구성하여 통신지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그래도 일부 56kbps로 구성된 중계회선은 전량 1.544Mbps로 고속화하고 데이터량(traffic)을 측정, 중계회선 부족구간에 대하여는 회선을 증설하여 패킷망내에서의 통신지연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할계획입니다.

ㅇ 또한 전국에 1차로 1,680회선의 고속통신포트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통신속도를 현재 14.4kbps에서 28.8kbps로 향상시켜 고속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데이터량을 조사하여 고속통신포트를 계속하여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나. 패킷망에 연결된 DB 접속회선

ㅇ 통신속도 저하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패킷망과 DB간에는 전용회선으로 연결되는데 연결된 회선이 부족할 경우 심한 병목현상(데이터량에 비해 통신로가 너무 좁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통신 속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ㅇ따라서 패킷망에 연결되어 있는 DB접속회선에 대한 데이터량을 측정하여 통신지연이 발생하는 회선에 대하여는 DB사업자에게 DB접속회선을 증설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 DB시스템 용량

ㅇ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최번시)에는 아예 DB에 접속이 안되거나 통신중 절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DB시스템의 용량에 관계되는 요소입니다.

ㅇ 한국통신은 데이터량을 면밀히 측정 분석하여 어느 시간대에나 원활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DB시스템 증설 등을 DB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라. 끝으로 PC통신이용자 여러분께 그동한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통신품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통신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혜택이 PC통신이용자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1996. 1. 23

한 국 통 신

2.3.1.11. 유료화연기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22일 저녁 7시 경에 황급히 발표된 한국통신의 <01410 패킷망 사용료 부과연기> 방침은 그동안 우리 PC통신 이용자들의 강력하고도 끈질긴 싸움의 전리품입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12월 중순경에 'PC통신의 주인'인 우리 이용자들과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사전홍보도 없이, PC통신이용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요금부과에 관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패킷망사용료>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우리가 그동안 내어왔던 <01410전화요금>이외에 분당 3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PC통신이용자들은 우선 한국통신의 일방적인 태도, 즉 우리 PC통신이용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통신은 우리 이용자들의 '인간적 자존심'을 감히 건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곧 플라자에서, 토론의 광장에서, 동호회에서, 심지어는 어린 동생들의 모임인 '꿈동산'에서 분노에 찬 항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한국통신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하이텔에서 나우누리에로, 여타 군소 BBS로 이러한통신인들의 움직임을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마침내 서명운동에 돌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5천명에 달하는 통신인들이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었고, 이러한 노도와 같은 서명운동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모인 몇몇 통신인들을 주축으로 1월 13일 <01410 부당요금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가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대중적인 항의운동이 <01410 대책회의>의 발족과 더불어 조직적인 대응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것과 함께 현행 "통신요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마침내 우리들은 한국통신이 부과하고자 하는 <패킷망 사용료>가 어떻게 부당한지, 그리고 기업적 이익에 의해 왜곡된 요금체계가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

게 된것입니다.

첫째, "01410 패킷망사용료"는 이미 우리들이 내고 있는 "01410전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통신이 다시 다른 항목을 내세워 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요금의 이중부과에 다름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음성통신에 적용되어 왔던 요금체계를 비음성 정보통신에 원용함으로써 "망사업자"들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으며,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할 것 없이 우리 PC통신 이용자들만 이들의 "희생양"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01410 대책회의>는 이러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PC통신 이용자들과 함께 싸워 나갔고, 한국통신에 대한 항의방문, 두차례에 걸친 대중집회, 그리고 각 언론사를 통한 홍보활동, 게시판에서의 항의운동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끈질긴 싸움의 결과로 한국통신은 마침내 <패킷망의 품질을 개선한후, 올 하반기에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연기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국통신의 연기방침이 대단히 기만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패킷망의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할 만한 기준은 무엇이고, 또 올 하반기라는 시점은 몇월 몇일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선 급한 김에 4월 총선을 넘기고 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미봉책이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를 얼마간 뒤로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패킷망 이용료 부과를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통신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서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기만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한국통신은 부당한 <요금의 이중부과>를 즉각 무효화해야 합니다. 만약 굳이 <패킷망사용료>를 받겠다면 현행 <01410 전화요금>을 할인하여 일반전화 요금의 30 ~ 50% 수준에서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비싼 데이타 통신요금은 최소한 현행 수준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둘째, 데이콤은 패킷망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천리안 이용요금>에 패킷망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데이콤측의 주장은 일반전화망을 통해 천리안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도 사용하지도 않은 패킷망사용료를 부과하는 셈이 되므로 그 모순이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요금의 부과내역과 부과과정은 우리 이용자들이 보기에 한점 의혹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정보통신부는 음성통신요금과는 분리되는 <데이타통신요금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직 데이타통신에 적합한 요금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함부로 자의적인 요금항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마땅히 정보통신부가 나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사회의 진정한 전위부대인 우리 PC통신이용자들은 위와 같은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신망과 정보통신의 공공성을 기업의 이윤추구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통신이 부과시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며 오산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를 위해 일하는 이용자들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

2.3.1.12. 대책회의 추후 활동

<01410 대책회의> 각 PC통신사에 공개요구 01/25 07:25 99 line

각 PC통신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합니다.

01410 패킷망 접속료 부과에 관한 우리의 결의

수 신 : 한국PC통신주식회사, (주)나우콤

발 신 :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

제 목 : 01410 대책회의 활동 협조 요청

그동안 01410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이용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각 PC통신사들은 이용자 입장에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책회의는 앞으로의 활동에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대책회의 대표아이디와 게시판 개설을 요청합니다.

한국통신의 패킷망 사용료 부과가 연기 발표됨으로써, 대책회의의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활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이용자의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해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의 창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그리 부담이 크지 않을 이용자의 몇가지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지 표명에 대한 신뢰감을 얻으시기바랍니다.

1.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약칭 01410 대책회의) 대표 아이디를 아래와 같이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D : 014XY (이용자명 : 대책회의)

2. 01410 대책회의 활동을 위한 게시판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01410 대책회의의 소개

3.1. 명칭 :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

대책회의

약칭 : 01410 대책회의

3.2 조직

가. 대표위원 5인

이름 하이텔 ID 천리안 ID 나우누리 ID

권은아 nouvell nouvelle

박인환 ssaico ssaico2

이동영 4zero fourzero fourzero

이으뜸 kabbala kabbala kabbala

정원석 adrian

나.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 20여명

3.3. 활동내용

가. 01410 패킷망 사용료 부과 반대 서명운동 현재 하이텔 4000여명, 나우누리 800여명 서명

나. 게시판 활동

다. 언론 홍보 활동

PC라인, PC서울, PC사랑, PC월드, PC플러스,

KBS, 월간 길, 한겨레신문, KBS, 전자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라. 요금체계 및 대안 연구

마. 한국통신 항의방문

바. 행사 주관

1월 13일 비상대책회의

1월 20일 결의대회

4. 참조

4.1 1월 13일 비상대책회의 결의문

4.2 1월 20일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경과보고문

4.3 1월 20일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요금 관련 자료

4.4 1월 22일 발표한 패킷망 사용료 부과 연기 조치에 대한 입장

이용자를 위해 일하는 이용자들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

2.3.2. 01410 문제에 대한 분석

2.3.2.1. 통신망 구성에 따른 요금 고찰 (글쓴이 : 이설희님)

■ PC통신서비스 이용시, 통신망 연결방법 두가지.

- 일반전화망을 이용

745-2100, 766-9696, 741-0228 과 같이 일반전화번호로 식별되며, 음성통신용의 전화망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제공업자의 호스트컴퓨터에 연결한다.

- 데이타전용통신망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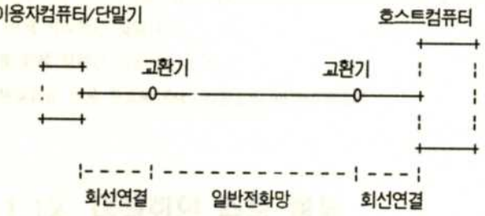
01410, 01420 과 같이 음성통신용으로 이미깔려 있는 일반전화회선에서 시작하지만, 데이타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패킷망에 연결하여 정보서비스제공업자의 호스트컴퓨터에 연결한다.

■ 패킷망이란 ?

데이타통신을 위해 개발된 통신망으로, 데이타를 조각내어 전송하는 기술을 이용해 통신라인 하나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게 함.
처음 통신회선으로 전송된 데이타를 시작패킷교환기가 작은 크기로 소각조각 잘라서 그 조각 하나하나에 식별주소가 붙인 뒤, 다른 사람들의 데이타조각과 섞어서 전송한다. 그리고 반대편 패킷교환기는 데이타 조각에 붙어있는 식별주소대로 목적지에 보내주는 것으로 데이타 전송을 끝낸다.
많은 사용자가 망을 공유할 수 있어 낭비요소를 없애고, 사용자에게 저.렴.한. 통.신.망. 비.용.으.로. 데.이.타.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패.킷.망.의. 근.본.목.적.이다. 그러나 동시사용자가 너무 많으면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화면스크롤이 내려오다 멈추고 또 내려오다 멈추는 현상. 데이타조각 단위의 전송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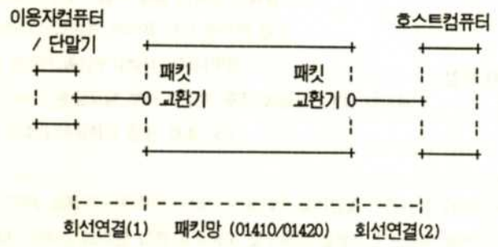
■ PC통신 이용시 망구성 개념도

<가.일반전화망 사용시 망구성 개념도>



이용자컴퓨터에서 호스트컴퓨터까지가 하나의 라인으로 직접연결되는 형태. (•• 일반전화망 : 한국통신 소유)
통신망 요금부담 : 음성통신과 완전히 동일요금 = 일반전화요금 (주간 40원/1분, 할인시간대 30 % 할인)

<나.데이타전용통신망 사용시 망구성 개념도(01410, 0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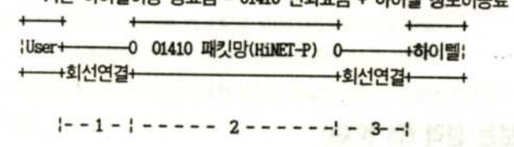


이용자컴퓨터에 이어진 음성통신용 라인이 패킷망에 연결되고, 다시 호스트컴퓨터로 회선연결되는 형태.
•• 회선연결(1) - 한국통신소유 음성통신망 이용
•• 패킷망, 회선연결(2) - 한국통신소유(01410) 데이콤소유(01420)

■ 'PC통신 요금체계'의 망구성 개념도에 따른 해석

< 가.01410의 기존 요금체계(하이텔 이용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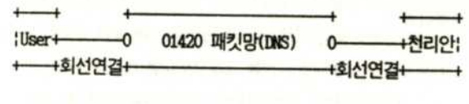
•• 기존 하이텔이용 총요금 = 01410 전화요금 + 하이텔 정보이용료



- 이용자 : <01410 전화요금>= 1+2 로 알고 한국통신에 지불했음.(현재 한국통신은 1만 받고, 2는 무료였다고 주장)
- 3에 해당하는 비용은 한국PC통신이 한국통신에 회선사용료 지불.

< 나. 01420의 요금체계(천리안 이용시) >

•• 천리안이용 총요금=01420 전화요금+천리안 이용요금(부가세포함) (천리안은 요금체계상 '정보이용료'가 아니고,'천리안 이용요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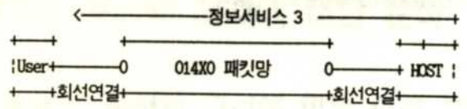


- <01420 전화요금>: 1을 제공하는 한국통신이 전부 가져감.
(••'01410전화요금'과 '01420 전화요금'은 요금기준이 등일함.)
- 데이콤은 2를 제공하나, <01420 전화요금>에서 해당요금을 나누어 받지 못함.
- 3은 데이콤소유회선이므로 요금지불 필요없음.(내부거래)

< 다. 한국통신을 불공정 제소한 데이콤 측 주장 >

- 01410에서 한국통신은 1,2를 제공하고 <01410전화요금>을 받았다.
- 01420에서 한국통신은 1만 제공하고 <01420전화요금>을 받았다.
- 즉, <014X0 전화요금>은 1요금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통신은 01410의 2요금, 즉 패킷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 데이콤은 01420의 2를 제공하고, '천리안 이용요금'에 이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다.
- 전화요금 수익이 있다는 이유로 마땅히 요금부과해야 01410의 2를 한국통신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에 이는 불공정 거래다.

< 라. 96/01/01일부터 바뀌었다는 PC통신 요금체계 >



** PC통신이용 총요금= 014X0 전화요금+ 패킷망사용료+ 정보이용료 = 1 + 2 + 3

** 하이텔이용 총요금= 01410 전화요금+ 패킷망사용료+ 정보이용료 = 1 + 2 + 3

** 천리안이용 총요금= 01420 전화요금+ 천리안 이용요금 = 1 + (2+3)

(정말 이게 옳을까요 ?)

■ 바뀌었다는 요금체계의 "PC통신인을 호구로 보는 성격"(열 받자!)

< 가. 패킷망의 근본취지는 무엇이었던가요 ? >

(2 페이지 일부인용)-------- 많은 사용자가 망을 공유할 수 있어 낭비요소를 없애고, 사용자에게 저.렴.한. 통.신.망. 비.용.으.로. 데.이.타.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패.킷.망.의. 근.본.목.적.이다. 그러나 동시사용자가 너무 많으면 속도(생략) ----------

과연 얼마나 저렴한지 계산해 볼까요 ?

골치아프게 계산할 것까지는 없고 (필요하면 플라자에서 li Snowlady 하세요.) 하이텔 이용시 패킷망과 일반전화망의 요금차이는 1일 30분, 30일 이용시 불과 1천원 차이 정도입니다. 패킷망이 속도면에서 일반전화망을 따를 수 없고, 또 불안정하기도 하니, 사실은 일반전화회선으로 이용할 때가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미쳤다고 패킷망 이용합니까 ?

왜 이런 웃기는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

< 나. 웃기는 사태 - 데이콤의 불공정 주장은 어디서 빗나갔는가 ? >

데이콤이 불공정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01410 , 01420 으로 전화요금 수익을 거두면 되지만, 데이콤은 막대한 투자를 들였던 DSN 망 수익을 거두는 길을 한국통신에 의해 방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이콤을 이 불공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 완전히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도 우리 죄없이 비싼 요금 물어온 이용자들이 다 덮어썼습니다.

그리고 음흉스런 한국통신은 "모른체 하고" 입다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통터지는 논리를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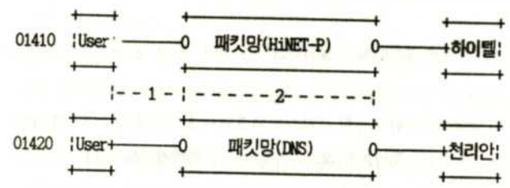
다시 <데이콤의 주장, 망개념도>를 보여드리지요.

((데이콤의 주장))

- 01410에서 한국통신은 1,2를 제공하고 <01410전화요금>을 받았다.
- 01420에서 한국통신은 1만 제공하고 <01420전화요금>을 받았다.
- 즉, <014X0 전화요금>은 1요금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통신은 01410의 2요금, 즉 패킷망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 데이콤은 01420의 2를 제공하고, '천리안 이용요금'에 이를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다.
- 전화요금 수익이 있다는 이유로 마땅히 요금부과해야 01410의 2를 한국통신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에 이는 불공정 거래다.

데이콤의 주장은 이렇게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 데이콤의 주장에 대한 PC통신 이용자의 주장 >



(PC통신 이용자의 주장)

- 01410에서 한국통신은 1,2를 제공하고 <01410전화요금>을 받았다.
- 01420에서 한국통신은 1만 제공하고 <01420전화요금>을 받았다.
- 즉, <014X0 전화요금>이라는 애매한 명칭의 요금항목은 1,2 요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통신은 01420에서 데이콤이 가져가야할 2요금을 부당하게 가로채 갔다 !
- 데이콤은 01420의 2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한국통신이 가져가는 "01420전화요금"에서 할당받아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천리안 이용자들이 내는 '천리안 이용요금'에 이를 포함, 청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돈을 가로채 갔다 !
- 따라서 이는 한국통신이 데이콤에 대해 불공정경쟁을 한 것이라기보다, 한국통신이 데이콤에 대해 절도행위를 하였고, 한국통신에 돈을 받지 못한 데이콤은 마침내 천리안 이용자에 대한 절도행위(부당요금청구)를 한 것이다 !!

자 , 여러분 속ㅅ이 시원하시지요 ?

이용자들이 내야 할 패킷망사용료을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통신이 데이콤의 패킷망사용료를 가로채 왔고, 또 데이콤은 그걸 받아낼 생각은 못하고 우리 천리안 이용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더니, 이제는 엉뚱하게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하이텔 , 나우누리 등의 이용자들에게도 이중부담을 뒤집어 씌울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데이콤 01420 패킷망사용료 떼먹던 한국통신이 음흉하게도 그 동안 무료로 이용하게 해줬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01410 이용자들에게 부과한 요금을 또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데이콤과 한국통신의 이용요금 논리가 비틀거리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지요.

물론 정보통신부도 한방 맞아야 할 겁니다.

자, 뺨을 내미세요...이빨 깨지니 꽉물고.

■ 데이콤, 한국통신, 정보통신부에 대한 카운터 펀치 !!

<가. 데이콤은 부당하게 징수한 "천리안 이용요금"을 게워내라!>

'천리안 이용요금' 에 패킷망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

일단, 한국통신이 가지는 "01420전화요금"에서 패킷망사용료를 떼가야 함에도 천리안 이용요금 속에 패킷망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용자에 대한 절도행위라는 것은 말한 바 있다.

그문제는 뒤로 좀 밀어놓고서라도, "천리안이용요금" 속에 패킷망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그럼 도대체 01420 이 아닌, 일반전화번호를 접속한 천리안 이용자들에게도 사용하지도 않은 "패킷망접속료"를 물도록 했단 말이지 않은가 ?

데이콤은 논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 마구 헤매고 있다.

정답이 있지 않은가 .

패킷망 사용료는 바로 "01420 전화요금"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

만만한게 이용자라고 엉뚱하게 천리안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다니... 어찌 내가 열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 하루빨리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안그러면 우리 이용자들이 <부당요금 징수>로 고발할 것이다.

<나. 한국통신은 데이콤 돈 게워내고, 패킷망사용료 무효화하라 ! >

거식증에 걸리신 한국통신은 데이콤의 "패킷망사용료"까지 "01410 전화요금"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먹어치우더니, 이제는 증거인멸을 위해 01410 이용자들에게까지 "패킷망사용료"를 이중부과하려 한다.

당신네들이 그동안 특혜와 독점으로 먹어치운 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 이제는 정말 정신차리고 "경쟁체제"하에서 질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이용료로

승부해야 할 시기이지 않은가 ?

전화가입할 때 받았던, 설치비 명목으로 무이자로 국민들에게 반강제로 빌려갔던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도 돌려줘야 하지 않는가 ? 자꾸자꾸 먹기만 하니까 그렇게 몸이 둔해지는 것 아닌가 ?

만약 이번 패킷망사용료 안 낸다고 버티면 또 전화 끊겠다고 협박할 셈인가 ? (그게 당신들의 주특기이더군..) 이미 낸 걸 또 받겠다니 정말 칼만 안든 강도가 따로 없지 않은가 ?

그리고 이건 좀 빗나간 것이지만, HiTEL-POP 하고, KT-MAIL에 해지메뉴 안 만들건가 ? 뭐 이용할 서비스도 없으면서 호기심삼아 들어가서 가입메뉴에서 가입한 후로, 해지메뉴가 없어 해지를 못하는데, 하나도 이용 안 해도, 고지서는 꼬박꼬박 오고, 며칠전에는 협박전화도 왔다.

데이콤에게 돌려줄 돈은 돌려주는 것이 옳다. 그것이 상거래 도덕이다.

< 다. 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것인가 ?>

이렇듯 데이타통신 요금체계가 개판이어서 한국통신이 데이콤 돈 뜯어먹고, 데이콤이 불쌍한 천리안 이용자 돈 뜯어먹고, 다시 한국통신이 하이텔, 나우누리 등의 이용자 돈을 부당하게 뜯어먹을려고 설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라도 한 건가 ?

정보통신부는 사회의 공익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통신사업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데이콤이나, 한국통신이 아우성치면 그 소리는 잘도 들으면서 우리 PC통신이용자들이나, 국민이 아우성치면 아주 우습게 보이는가 ? 제발 낮은 곳에 임하소서! 아멘~

정보통신부는 즉시, 통신망사업자들의 손아귀에서 통신요금이 "모호한 요금항목"이라는 방식으로 조작되는 바람에 대다수 서민, 학생 층으로 이루어진 PC통신 이용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장관님. 호소합니다...

한국통신이 데이콤 돈 뺏고, 데이콤이 천리안 이용자들 돈 빼앗았어요. 학교주변 폭력배가 아니라, 이건 날강도들입니다..

제발. 천리안 이용자들의 돈을 돌려주세요! PC통신 이용요금 체계를 바로잡아 주세요!

■ PC통신 이용요금체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가. 데이콤의 논리, 이용자의 논리, 어느 것이 옳은가 ?>

(1) 음성통신과 비음성데이타통신의 요금체계에 대한 혼동.

음성통신이란 곧 "전화"를 말하는 것이고, 비음성데이타통신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주자가 "PC통신"입니다

음성통신은 일반전화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때 일반전화망은 전화와 전화를 연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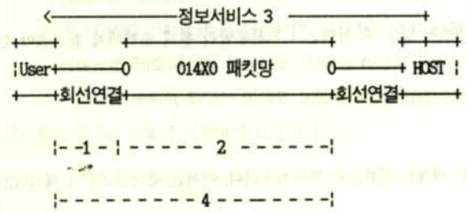
그러나 패킷망을 통한 데이타통신에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어쨋든 우리가 접하는 통신망의 맨끝은 일반전화선입니다만, 그 때의 일반전화선은 패킷망에 연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통.로.로.서.만. 의.미.가. 있.을.뿐.이고, 핵심요소는 패킷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접속하고자하는 목적 통신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01410 전화요금" 혹은 "01420 전화요금"이라는 애매한 이름의 전화요금을 내야 합니까 ? 우리가 언제 전화썼습니까?

사실 한국통신도 "전화요금"이라는 이름으로 돈 받기는 꺼림직했던지, 앞에다가 굳이 01410, 01420 이라고 붙이고, 또 할인혜택도 줍니다. 돈을 제대로 받을려면, 요금항목을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 "014XY 전화요금"도 받고, "패킷망사용료"도 받고 할 것이 아니라 , <전용데이타 통신망사용료>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런저런 항목을 되는대로 만들어서 망사용료를 쪼개어 놓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나. PC통신의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다시 " 패킷망을 통한 PC통신서비스 망의 개념도" 입니다.



** PC통신이용 총요금

= 014X0 전화요금+ 패킷망사용료+ 정보서비스이용료

= 1 + 2 + 3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통신망사용요금이 두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목이 많이 만드는 것은 요금을 비싸게 하겠다는 의도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4의 회선연결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의 패킷망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1,2를 다 포괄해야 하나의 완성된 통신망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바로 <데이타전용통신망(PSDN)>이라 해야 합니다. 즉, 2를 중심으로 1을 포괄하는 요금항목인 <데이타전용통신망사용료>로 통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망 구성에서 일반전화망과 패킷망을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망은 합쳐져야 망이 됩니다.

** PC통신이용 총요금

= 데이타전용통신망사용료 + 정보서비스이용료

= 4 + 3

요렇게 되어야 합리적이지요. 망사용에 대해서는 망사용료, 정보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정보서비스이용료 !

그리고 통신사업과 같은 공익성 사업이 절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신이용자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화정책에 입각한다면, 더욱 더 데이타통신망 요금은 일반 음성통신 요금보다 더욱 저렴해야 합니다..

PC통신이용자들은 대부분 30대 이하이고 10대, 20대 초반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않은 청소년 층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을 통신이용을 짓밟아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둡게 됩니다.

이번 한국통신의 01410에 대한 패킷망사용료 부과조치는 즉각 무효화되고, 제대로 된 PC통신 요금체계의 정립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읽으주셔서 고맙습니다.

2.3.2.2. 통신망의 공공성을 기업적 이해관계로부터 구해내자 ! (글쓴이 : 이선영)

<< 통신망의 공공성을 기업적 이해관계으로부터 구해내자 ! >>

(이 글을 매우 긴 글입니다. 01410 문제를 통해 볼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찬찬히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이니, 찬찬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인 시간만큼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글에서 저는 01410 패킷망사용료 징수를 둘러싼 각 세력의 격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PC 통신인 뿐만 아니라, 정보화추세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한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통신의 패킷망사용료 부과를 극구 반대하고 있고, 그 반대이유는, 첫째, 우리 PC통신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점. 둘째, 부과방침의 결정과정 및 홍보과정에 미심쩍은 점이 많다는 점. 세째, 크게는 정보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 등에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반대이유는 무조건 정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번 01410 패킷망 사용료 징수라는 표면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정보사회에서의 통신망>을 둘러싼 거대한 이해관계의 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정보사회에서 <통신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정보사회로의 이전을 우리는 흔히 '정보화'라고 하며 나아가 '정보혁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혁명'이란 쉽게 '과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산업이 바로 <정보통신산업>입니다.그리고 '정보통신산업' 혹은 '정보사회'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기간 통신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근간인 것입니다.

지금 선진각국에서는 <기간 통신망>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입각해서 국가적인 통신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 앨고어가 주도하는 <Information Super Highway>, 일본의 <정보고속도로>, 싱가포르의 <IT 2000 계획>, 그리고 유럽에서도 '유럽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고속도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물론 우리나라도 이에 빠지지 않을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4년까지 전국적 광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초고속통신망>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의 교통수단이 없는 근대산업사회를 생각할 수 없듯이, 앞으로는 통신망이 정보사회의 사회간접자본이 될 것이며, 이를 도로,

항만, 철도 등을 <사회간접자본>이라 부르듯이 통신망을 <연성(덜딱딱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통신망>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자산이며, 개인 혹은 기업에 의해 마음대로 휘둘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도로를 이용해서 택시를 몰거나, 화물를 운송해서 돈을 버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일이지만, 도로 그 자체를 사유하고 통행세를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금지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통신낭>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개발해서 장사하는 일은 정당하지만, <통신망> 그 자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함부로 사유하고 제멋대로 통행세를 받는 행위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통신은 그동안 엄청난 특혜를 누려 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통신사업을 독점해왔고, 이는 곧 국민의 혈세가 한국통신에 쏟아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은 직접 한국통신에 돈을 갖다 바치기조차 했습니다. 전화 한대 가입시 우리는 설치비라는 명목으로 20만원 이상의 돈을 무상으로 한국통신에게 갖다주었습니다. 낼 전화요금은 꼬박꼬박 다 내고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한국통신을 지원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신망>이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통신은 그 설립에서부터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기업>이며, 따라서 '공공의 이해관계'가 항상 우선해야 하고, 이윤추구는 항상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 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한국통신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산간오지 낙도에까지 전화선을 깔고, 나름대로 공공복리를 위해 일해왔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한국통신은 우리로부터 비판받아야 하는 점도 많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준 특혜와 국민이 준 혈세와 국민이 기꺼이 부담한 준조세와 국민이 낸 비싼 전화요금을 국민이 명한 목적에 쓰지 않고, 엉뚱한 낭비를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허스럼한 시골동네에 가더라도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으리으리한 건물은 <한국통신>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외양은 공룡처럼 커졌지만, 그동안의 특혜에 안주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할 '국제경쟁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한국통신은 국민이 대 준 막대한 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다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소홀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통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영기업체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데이콤을 살펴봅시다.
데이콤이 만들어진 배경은 바로 '한국통신이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곧 시장개방을 해야 할텐데 정부(정보통신부)가 생각해봐도 한국통신은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내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간다.>라는 취지에서 데이콤을 설립하고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던 것입니다.
국제전화, 시외전화 등에서부터 이번의 01410 패킷망사용료 문제에 이르기까지 데이콤은 기존의 한국통신 독점체제에 끈질기게 도전하고 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데이콤의 설립취지와 존립기반 그 자체가 한국통신 독점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정보통신부)는 항상 데이콤 편을 들어왔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정부가 데이콤을 만든 이유가 한국통신과 싸움을 붙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싸움에 정부가 데이콤편을 드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진/정/ 국/민/, 혹/은/ 우/리/ PC/통/신/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업/적/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것이 정부투자기관이든 아니면 민간기업이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하며, 이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01410패킷망 사용료 부과에서 데이콤이 한국통신을 불공정거래라고 제소했던 것, 또 정보통신부가 데이콤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 한국통신이 군소리 없이 이를 따르는 것은 과연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먼저 데이콤의 불공정거래 제소가 말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데이콤의주장은 자신들은 01420 패킷망사용료(18원/1분)를 '천리안 이용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01410은 전혀 패킷망사용료를 무료로 쓰게 하고 있으므로 불공정거래라는 것입니다.
즉, 패킷망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01410으로 HiTEL을 이용할 때
<1.한국통신은 '일반전화망'과 '01410 망(HiNET-P)'을 제공하고 전화요금을 받고>,
<2.한국PC통신은 HiTEL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01420으로 천리안을 이용할 때는
<1. 한국통신은 '일반전화망'을 제공하고 전화요금을 받고> ,
<2. 데이콤은 '01420망(DNS)'와 천리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천리안 이용요금'을 받습니다.>
** 참고 : 우리가 01410, 01420 패킷망을 이용할 때 어쨌든 우선은 일반전화망에서 시작하여 패킷망에 연결됩니다.

데이콤 측에서 불공정하다고 제소한 것은 자신들은 01420을 제공하면서 '천리안 이용요금'에 포함하여 패킷망사용료를 받는데, 한국통신은 01410을 제공하고도 전혀 그항목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통신은 01410 사용료를 받지 않고도 전화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아직 시내전화에까지 진출하지 못한 데이콤으로서는 전화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들인 01420(DNS)에 대한 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데이콤의 불공정 제소는 참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데이콤은 DNS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자니 한국통신이 전화요금 빽만 믿고 무료로 주고 있어 경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01410 패킷망사용료를 마땅히 내야 하는 것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용자의 입장에서 01410요금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패킷망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전화요금과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요금, 패킷망사용료,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패킷망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1. 우선 일반전화망을 통해 데이타전용통신망(패킷망)에 연결해서
2.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서비스이용료를 내야 하는 데는 별 이의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전화망을 반드시 경유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킷망에 접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즉 일반전화망을 통한 패킷망 접속은 우리 이용자에게 분리된 과정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패킷망 접속까지 경유해야 하는 일반전화망은 "데이타전용통신망(PSDN)"을 일부분이라도 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01410 혹은 01420 망에 접속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화비 따로, 패킷망사용료 따로 내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신망을 사용하므로 당연히 통신망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망는 <데이타전용통신망(PSDN)>이므로 "데이타통신망(PSDN)사용요금"을 내야하는 것이지, 엉중하게 "전화요금 즉, 일반전화망(PSTN) 사용요금"를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요금"은 애초에 전화기를 이용한 <음성통신>에만 적합하게 만들어진 요금체계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데이타통신>에 적합한 요금체계를 <음성통신>과 분리하여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PC 통신 등의 <데이타 통신>에는 데이타 통신에 걸맞는 요금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PC통신요금은 바로 <데이타전용통신망(패킷망)사용료 + 정보서비스이용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01410 이용시 < 01410 전화요금+ 정보서비스이용료 > 를 내왔고, "01410 전화요금"은 일반전화요금의 70 % , 49 %(할인시간대) 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껏 내왔던 "01410 전화요금"이 <데이타전용통신망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01410 전화요금> = <데이타전용통신망 사용료> = <패킷망사용료> = <01410 접속료> , 이상의 것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은 개념의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01410 전화요금" 외에 "패킷망사용료"는 받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
그것은 결국 "패킷망사용료"에 더하여 "패킷망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으로 한/가/지/에/ 대/해/서/ 이/름/만/ 달/리/해/서/ 두/번/ 요/금/받/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합니다.
한국통신은 똑같은 것에 대해 두번 요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01410 전화요금>은 뭐고 <패킷망 사용료>가 뭡니까 ? 만약 <01410 전화요금>외에 <패킷망사용료>를 받겠다면 그것이 어떻게 <01410 전화요금>과 다른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콤은 DNS를 가지고 있지만, DNS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사용자 단말에서부터 01420 까지)를 한국통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DNS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결통로를 데이콤이 한국통신의 일반전화망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 따라서 이용자가 한국통신에게 전화요금을 지불하는 형태가 아니라, 데이콤이 사용자들로부터 <01420 사용료>를 받고, 대신 데이콤이 한국통신에 <일반전화망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통신이 <01410 전화요금>이라는 항목으로 받고 있는 <패킷망사용료>를 항목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또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내 <통신산업>을 콘트롤해야 할 정보통신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비음성정보통신분야"에 대해 "음성통신"과는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전화망에 대해서는 "일반전화망 사용료" 즉 일반전화요금을 받도록하고, 데이타전용통신망에 대해서는 <데이타전용통신망 사용료 + 정보서비스이용료>를 받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 기간통신망 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격돌과정이 공공의 이익을 배제하고, 자신의 기업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정보통신부가 정신못차리고 정책입안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우리 PC통신 이용자들과 국민대중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엄청난 왜곡을 겪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국내정보통신산업을 다시 주저앉힐 위험이 있습니다.

PC통신 이용자 여러분 !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는 집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자들과 정부는 정신을 못차리고 엉뚱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용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이용자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13일) 3시 대학로 칸타타에서 열릴 <01410 패킷망사용료 부과 반대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에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20일)로 예정된 <항의시위>에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플라자와 토론의 광장을 비롯한 모든 게시판에, 천리안-나우누리를 비롯한 모든 통신망에 이를 알리고, 제 글을 옮겨 주십시오. 말머리에 [비상대책회의]라고 일제히 써 주십시오.

사업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

패킷망 사용요금 이중부과를 반대한다 !

음성통신에는 일반전화요금을, 데이타통신에는 데이타통신요금을 !

PC통신의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만 해낼 수 있습니다.

긴 글 감사합니다.

2.3.2.3. 한미간의 무역마찰로 바라보는 시각 (한국과학기술청년회의 김영철)

먼저, 저의 긴 글(한국 통신은 대사기극을 중단하라)을 읽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한국 통신이 01410 접속시 패킷 사용료를 추가로 받기로 한데 따른 여론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가 아닌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하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도 모르게 패킷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었군요. 통신인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과학 기술 청년회'는 '이동 통신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토론 자료 준비에 매우 부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형편상 우선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드리고자 하니 이 점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통신이라는 거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동 통신과의 관계, 그리고 외국의 통신 정책을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순으로 알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우습게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연구하는 것이 그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마련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통신의 패킷 접속료 징수가 매우 불쾌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한국통신은 유료화를 전제로 'Hinet-P'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밀접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PC 통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이전에 어떠한 설명이나 홍보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한국 통신의 내부 계획일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결정해 놓고 '여태 그것을 몰랐느냐, 한국 통신의 형편이 이러 하니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돈을 내지 않으려면 이용하지 말아라'는 식의 오만함이 그들의 사고 방식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통신망의 이용이 무슨 ShareWare (처음에 거저 사용해 보다가 맘에 들면 비용을 내고 계속 사용하는 판매 제도)라도 된다는 겁니까?

한국 통신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패킷 교환망은 망구축에 필요한 장비가 비싸고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비싼 장비에 대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통신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01410을 통한 회선사용료는, 비록 일반 전화 요금보다 싸다고는 하지만, 한국 통신의 시내 통화 수입에서 무시하지 못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접속 포트의 증설, 전송 속도 및 시스팀 처리 성능의 개선 등으로 과거보다 접속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접속이 쉽지 않은 데서 우리는 01410의 통화료 수입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패킷 교환기를 설치하여 이만한 통화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 남는 장사지요.

그러나, 한국 통신은 01410의 패킷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연이 감춰져 있습니다.

지난 89,91년 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신 시장 개방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협상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린 매우 불공정한 룰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통신 협상은 89년 2월 미국이 우리 나라에 전달한 이른바 '비공식 서한(Non-paper)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01410의 패킷 접속료 징수 문제는 이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습니다.

I-G. 공정 경쟁의 확보(Competition Safeguards)

1. 한국 정부는 독점 업체(한국 통신을 말함)가 경쟁 서비스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계열 회사의 조정을 통하여 미국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호 보조 및 가격 덤핑에 의한 시장 잠식, 유보된 독점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접속과 망에 대한 필수 기술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의 금지를 포함한다. 독점 업체가 계열 회사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한국 정부는 1항의 조항에서 언급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무엇보다 구조적 분리(Structural Seperation), 기업 공개(Disclosure Requirments), 회계 규정(Accounting Rules) 및 개방적인 네트웍 설계(Open Network Design Arrangements) 등을 포함할 것이다.

이어서 90년에 한미 양국은 패킷 교환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EDI, MHS, CODE/PROTOCOL 변환, E-mai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교환기'의 접속 허용
2. 64 kbps를 초과하는 다중화 장비(MUX)의 사용 승인 제도 폐지
3. 2.049bps 이상의 다중화 장비 접속 허용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망을 가지고 있는 한국 통신과 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쟁 회사(국내 기업 과 외국 기업)가 패킷 서비스를 하기로 한다면, 독자적인 망을가지고 있지 않은 경쟁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패킷 사용료나 정보 사용료를 징수하여 이 중의 일부를 한국 통신에 회선 임차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통신은 자신의 기존 회선을 이용하므로 자사의 고객에게 통화료나 패킷 사용료, 정보 사용료 등을 할인해 준다면 경쟁 회사는 한국 통신과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에서 말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즉 반경쟁적 행위가 다는 것입니다. 한국 통신이 경쟁 회사인 데이콤의 002나 082보다 싼 요금을 채택하는 것도 반경쟁적인 행위가 됩니다.

2항의 구조적 분리(Structural Seperation)는 한국 통신의 사업 분리 및 통신 서비스의 경쟁화(미국 업체가 한국의 통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내에서 경쟁 체제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를 말하며, 기업 공개(Disclosure Requirments)는 한국 통신의 민영화, 회계 규정(Accounting Rules)의 반경쟁적인 행위의 금지는 예를 들어 한국 통신이 장거리 전화로 벌어 들인 수입금을 수입이 덜한 정보 서비스에 전용하여 값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회계 분리라고도 말합니다.

이상은 한국의 통신 시장에서 미국의 회사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장치가 됩니다. 한국 기업끼리의 통신 서비스 경쟁화는 미국의 회사가 한국 시장에 저항 없이 상륙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의 경쟁 회사들은 미국의 이같은 요구가 자사에게도 유익하므로 이해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국내 재벌 기업의 압력으로 회선 자유화를 거듭 실시하였습니다. 이 회선 사용 제도 자유화는 이론적으로는 회선 임차료를 낮춰 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용자인 국민의 통신 요금 인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경쟁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싼값으로 한국 통신의 회선을 임차하여 자체 망을 구성하여 통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외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도시, 산간 벽지에 시내 전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 통신 예산의 60%는 이 시내 전화의 시설(전화국, 교환기, 시내외 선로)을 증설하고 유지하는 데 투입됩니다. 반면에 데이콤 등 경쟁 회사는 시내 전화 시설에 대한 부담 없이 한국 통신으로부터 싼값에 회선을 임차하여 자체망을 구축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이들 경쟁 회사들은 한국 통신을 '반경쟁적인 행위의 금지'로 묶어 자신들보다 더 싼 요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97년부터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같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 통신이 자사의 패킷 교환기에 대한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것을 경쟁 회사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 지목하여 정부(통신 위원회)에 이를 제소하게 됩니다. 한국 통신은 실제로 이같은 제소에 따라 정부(통신 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 즉 패킷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부착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의 통신위원회는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II-F. 독립적인 규제 기관

1. 한국 정부는 독립된 정부 기관을 설립하여 경쟁을 위한 조치(위의 I-G)를 수행하고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조건과 요금의 조정을 포함한 독점 서비스 및 활동을 관리할 것이다. 이 기관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독점 업체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게 될)미국 회사와의 사이에 일어날지 모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정 처리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정부는 이러한 독립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보는 그 법률의 초안 내용을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패킷 접속료가 공공 요금이 아니라는 정부와 한국 통신의 주장 역시 미국의 압력 결과입니다.
미국은 시내 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 서비스를 이른바 '비독점 서비스(경쟁 서비스)'라고 친절하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전화, 시외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모든 통신 서비스가 경쟁 서비스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같은 합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기 통신법의 '공중 전기 통신'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공중 전기 통신'이라는 용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신은 모든 국민에게 고루 향유되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입니다. 보편적 서비스 개념, 즉 통신의 공공적 성격이 배제된 이후 통신은 재벌에게 이익을 안겨 주는 황금 거위일 뿐 국민들의 통신 이용 편익과는 상관 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다양한 첨단 통신 서비스들은 매우 비싼 요금 체계를 바탕으로 재벌들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요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의 많은 국민의 통신 이용 편익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합 정보 통신망(ISDN)은 이전의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SDN 체제 하에서의 통신 이용 요금이 이전의 전화 이용 요금과 유사하거나 크게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의 전화 가입자당 월 평균 전화 요금은 2만원 수준입니다. 전화, 팩스, 데이터 통신, 이동 통신 등 모든 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합쳐 주는 ISDN의 요금 수준도 이와 유사하지 않다면 모든 계층의 국민이 ISDN 서비스를 향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가정에 전화가 1대 있고 자녀들이 하이텔과 삐삐를 사용한다면 후자의 요금이 전화 1대의 요금과 같습니다. 이동 전화(휴대폰)는 어떻습니까? 기본 요금이 월평균 전화 요금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전화 요금도 부담하지 못할 저소득층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첨단 통신 서비스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어, 엉뚱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다시 01410의 패킷 사용료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이콤의 DNS(01420)는 요금 구조를 하이텔과 다르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패킷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월 10시간까지는 같은 기본 요금을 적용하고 10시간 초과분부터는 1분당 30원의 정보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 30원은 패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을 하다 보면 한달에 10시간 초과하기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통신인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한국 통신의 01410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패킷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하이텔 이용 요금(월 9,000원; 부가세 별도)에 패킷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01410을 경유하여 타 경쟁 회사의 망에 접속되는 경우 경쟁 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패킷 사용료를 정산 받아야 합니다. 정부, 한국 통신, 경쟁적인 컴퓨터 통신 회사들은 현재의 정보 이용료가 결코 낮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꺼떡하면 일본과 요금 비교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통신 요금이 월 1만엔이라면 이것을 환율 대비로 하여 7만원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과의 비교는 해당 국가 내에서의 화폐 구매력과 비교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1만엔은 한국에서 1만원과 같습니다. 일본은 물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1만원보다 구매력이 더 떨어집니다. 환율이란 것은 외국의 화폐에 대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곧 외국의 화폐가 자국의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1만엔이 한국에서 1천원에 거래되든 10만원에 거래되든 1만엔의 구매력은 여전히 1만엔입니다.
한국 이동 통신은 한국 통신과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낼 수 있을 때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 성의가 부족한 점 양해하여 주십시오.

1995. 1. 9.
김 영 철

2.3.2.4. 한미통신협상과 정보통신정책 (6공의 정보통신정책 평가)

■ 정책의 개요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정보통신은 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독점성이라는 전통적인 개념과 보편적 서비스론 및 기술적 통일성 확보라는 정보통신의 3대 속성에 기초하여 정부(이후에는 공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되어 왔다[22].

22. 통신사업은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투자가 따르고 이를 운용관리하는데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며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통신사업을 경쟁체제로 할 경우 투자에 있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중복이 따르며 사회전체로 볼 때 엄청난 비용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하면서 제공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라는 것을 전기통신의 자연독점성이라 한다. 보편적 서비스론은 전국규모의 통신서비스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균일한 요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만일 통신사업을 시장경쟁체제로 할 경우 사업자는 인구밀도가 높고 통신량이 많은 대도시지역에만 집중 투자를 할 것이고 산간벽지나 낙도등의 비채산지역은 소외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통신할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망의 기술적 통일성이라는 것은 단일 사업자가 통신망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여러 사업자가 나서는 것보다 망의 지속적인 진화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신망의 기본적인 속성이 통합에 있는데 반해 여러 사업자에 의해 운용될 경우 서로다른 통신방식과 기술을 사용하게 되어 통신망의 상호연동에 제한을 주게 되며 이들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의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초반부터 불기시작한 정보통신혁명은 산업의 정보화, 정보의 산업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시켰고 전체 산업부문에서도 이의 역할과 위상이 극도로 강화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이 그 자체로서도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 동시에 제조업 뿐아니라 금융,유통,여행등 여타 서비스산업의 하부구조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기존 산업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정보자체가 산업화되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세계각국은 정보통신 기반구조정립을 국가발전의 전략적 핵심적 과제로 채택하고 이 부문의 현대화,고도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 뿐아니라 서비스 수요자의 정보통신 욕구도 전화나 전신뿐아니라 데이타, 영상등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과거 통신서비스의 독점공급체제보다 경쟁체제가 다양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미국,일본,영국 이른바 통신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통신시장에의 경쟁도입과 개방화 추세는 통신시장개방의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었고 전통적으로 독점을 유지하여온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에도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그간 독점상태에 있던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대내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다양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대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일본,영국을 중심으로 한 통신사업의 자율,개방화 추세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히 무역보복을 무기로 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방압력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6공의 정보통신정책은 바로 이러한 대내외적 추세와 개방압력의 부담을 안고 정보통신시장을 개방시키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위한 산업육성,기술개발,사회의 정보화 촉진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왔다.

■ 정보통신정책의 흐름

81년까지 체신부가 직접 운영하던 전기통신사업은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현재의 한국통신)가 설립된 이래 10여년 이상을 한국통신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다. 또 통신서비스별로 전문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통신서비스 특성별 전담사업자지정 정책을 추진하여 1982년 한국통신으로부터 데이타서비스 및 특정통신서비스부문을 분리시켜 한국데이타통신주식회사(현재의 데이콤)를 설립하였다. 1988년에는 차량전화및 무선호출서비스를 분리시켜 한국이동통신을 설립하였고, 해운항만 유무선 통신사업을 분리시켜 한국항만전화(주)를 설립하였다.
80년대 들어와 우리의 통신정책은 그간의 성장추세를 밑거름으로 하여 기간통신수요의 완전충족, 통신기술진흥 및 통신산업육성,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3대 기조로 전개하여 만성적인 전화적체를 해소하고 전국전화자동화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전화시설수는 1987년 9월에 1,000만 회선을 돌파 1992년 3월말 현재에는 1,750만 회선을 확보하여 전화서비스 시설면에서는 세계 9위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음성통신을 위주로 하던 통신의 개념은 8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데이타처리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기업들은 정보통신을 통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이들을 중심으로 데이타 서비스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사업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요구되었다. 이에따라 당시까지는 공중망우선원칙에 의해 최대한 사용이 규제되어 왔던 전용회선 사용제도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전용회선 사용제도가 새로이 부상하는 정보통신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1985년 1월부터 회선의 사용규제를 점차 완화해가기 시작했다. 규제완화는 주로 '전용회선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그 '회선에 부착할 수 있는 교환/전송장치의 허가'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때부터 국내 정보통신은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서서히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왔으며,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의 시장규모도 점차 증대되어 왔다. 그룹VAN 형태로 시작된 국내 민간데이타통신은 규제완화의 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그룹내 통신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서비스로 전개하게 되면서 그 시장규모도 올해 2,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오히려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의 잠재력에 눈독을 들이게 한 결과가 되었을 뿐아니라 이들의 주된 시장공격 목표가 되고 말았다.
1989년 2월 한국은 EC(유럽공동체)와 함께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한국시장과 장차 세계시장의 중심이 될 중국,러시아,동남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서 미국은 한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자국의 진출을 보장받아 일찌감치 정보통신을 통해 한국을 자국의 전진기지회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1992년 2월 제10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3년간의 협상끝에 미국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손에 쥐게 되었고, 우리 정부는 정신없이 시장개방의 빗장을 열어놓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속사정으로 우리의 정보통신정책은 급속도로 개방화로 치달았고, 한국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정보통신시장개방의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통신환경의 변화로 정보통신정책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안으로는 국내업체들의 요구로, 밖으로는 개방압력으로 대내/외 시장 개방을 동시에 수용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먼저 통신사업의 전면적인 재편을 통해 국내 사업자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외국자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통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통신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며 통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90년7월 100여년간 유지해온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통신사업 구조조정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통신사업구조조정의 기본 구도는 ▲대규모 설비가 소요되는 시내전화사업은 독점체제를 계속 유지시키고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고 기술변화가 급속한 장거리,국제전화 및 이동통신 분야는 점진적으로 경쟁을 허용하며 ▲다양한 서비스개발이 요구되는 VAN등 부가통신분야는 조기에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라 VAN서비스은 국내/국제를 불문하고 전면 개방되었으며, 이동통신,TRS(주파수 공용통신)등 특정통신서비스부문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참여를 보장한데 이어 국제전화서비스에 데이콤을 제2사업자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어 91년에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올해에는 이동통신시장 개방의 전초전으로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96년경에는 제3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이동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국제전화서비스부문에도 제3사업자를 추가지정하고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외전화 전화서비스 부문에도 제2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있어 향후 몇년내로 모든 국내 정보통신시장이 개방체제에 편입되어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그리고 외국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 6공 정보통신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방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미통신협상의 경과와 의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한미통신협상의 경과와 의의

"개방과 경쟁" 정책의 일차적인 배경이 되었고 통신사업 구조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했을 뿐아니라 향후 국내 통신산업의 구도와 위상을 결정하게 될 한미간의 쌍무협상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통신정책을 이해하고 미래의 전망을 내오기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3년에 걸쳐 10여차례 이상 진행되었던 한미통신협상의 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 협상의 경과와 합의사항

미국과의 통신협상은 협상의 배경과 협상 후의 사태를 전망하기 위해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협상이전인 87~89년 2월을 1단계로,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어 쌍무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였던 89년 2월 ~ 92년 2월을 2단계로, 92년 2월이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협상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단계 : 쌍무협상 이전(87년 ~ 89년 2월)

80년대 초 제조업부문의 급속한 해외이전으로 자국내 제조업의 퇴조와 서비스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신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체제의 강화와 군사력 우위에 의한 세계지배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단행함으로써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만성적인 쌍둥이적자와 함께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군사·항공부문의 필요성과 결합하여 전세계를 통틀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절대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해놓고 있던 미국은 이를 통해 그동안 쌍둥이 적자로 실추된 자국의 국제적 지위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타국의 정보통신시장을 개방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고 절대우위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독점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통신서비스분야에 시장경쟁의 논리를 적용시켰고 거의 독점적 지위에 있었던 AT&T(미국전신전화회사)를 분할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도 타국에 대한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 요구가 의도대로 쉽게 관철되지가 않자 국가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표본이라 할 수 있는 88 종합무역법에 통신부문을 첨가시켜 수퍼 301조라는 힘의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반강제적으로 시장문을 열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88년 8월 23일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USTR(미무역대표부)은 자국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에 대하여 본격적인 통신관련 무역조사를 하면서 시장개방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한국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가 상당히 폐쇄적임을 알아채고는 개방의 칼날을 휘둘 수 있는 최적의 대상으로 한국을 선택하고, 88년 12월 비공식서한(non-paper) 을 통해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개방범위를 요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요구사항을 당장 수용하지 않으면 자국의 종합무역법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이러한 개방요구를 할 수 있었던 명목적인 배경은 한국이 미국의 전화단말기시장에 대해 매우 큰 흑자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87~88년 당시 우리가 미국의 전화단말기시장에서 무역흑자를 누렸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전화기내부의 핵심부품은 거의 외제였고 우리는 이미 미국으로 부터 엄청난 양의 통신망장비를 수입해서 쓰고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통신기기 시장에서 우리가 결코 무역흑자를 보고 있었다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빌미삼아 통신단말기시장뿐 아니라 서비스, 조달, 관세, 표준등 전기통신시장 전체를 개방하라고 요구해왔다.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에 준비가 전혀 없었던 우리의 정책당국은 매우 당황하여 미국에게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두차례의 협상 을 통해 사정을 했으나 미국 다국적기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던 미국측 협상측에 의해 무참하게 거절당했다. 그리하여 89년 2월 22일 한국은 미국에 의해 마침내 역사적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한미간의 쌍무협상은 1년씩 두차례를 연기하면서 종합무역법이 정한 협상시한을 전부 채우고 난 지난 2월까지 계속되었다. 공식적인 협상만해도 무려 10여 차례나 가졌고 91년 UR협상중에 가졌던 두차례의 국제VAN협상 까지 하면 12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미국은 "심판전원 판정승"의 양해각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우리측 당국은 "참패"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대해 거의 전부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제2단계 : 쌍무협상(89년 2월 ~ 92년 2월)

미국법에 의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은 89년 9월 1차협상부터 협상테이블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1년의 협상시한이 끝날 때마다 1년동안의 협상내용을 정리한 양해각서(ROU) 가 교환되었으며 총 세 차례의 각서는 곧 한미간의 통신에 관한 상호협정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10차례의 쌍무협상 결과로 합의된 한미통신협정의 내용과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협상은 크게 통신서비스, 정부조달, 표준, 관세 네부분으로 나눠어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한정된 지면관계상 관세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문의 합의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① 통신서비스

미국이 협상사안중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서비스 부문이다. 기기시장보다도 훨씬 더 방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클뿐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시장에 대해 미국은 총력을 기울여 개방을 요구해왔고 개방범위의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 이를 관철시켜왔다. 아직 유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이를 장악함으로써 이후의 안정된 시장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측이 주장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방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개방대상 서비스의 범위

초기에는 주로 데이타전송, DB/DP, E-mail, EDI, 화상 및 FAX전송서비스, 패킷교환서비스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즉각적인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점차 시외/국제전화서비스, 이동통신등 기본통신서비스뿐아니라 CATV시장까지 개방하라는 요구까지 하였다. 현재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완전 개방을 하고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정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계속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당시 국내 업체에게도 개방되지 않았던 내용들로서 이에 개의치 않고 외국업체에 대해 먼저 개방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우리 당국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대외개방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기간중에 서둘러 국내 업체들에게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대내 개방을 단행하였고 이와 거의 동시에 외국기업에게도 차례로 개방을 하였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전 범위를 개방한 것도 국내 통신산업에 일대 파란을 몰고올 엄청난 사건인데 미국은 여기에 만족치 못하고 아예 우리의 통신주권을 송두리 채 퍼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개방요구 목소리는 너무도 크며 UR에서까지 이 문제가 공식적인 논제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간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측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우리측 당국의 협상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3~4년이 지나면 기본통신서비스까지 미국자본에 개방될 것은 틀림이 없다. 기본통신서비스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할 통신주권 수호를 위한 마지노선이다. 100년 이상 우리 민족의 피땀으로 일구어온 중추신경을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미국자본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유통되는 중추적인 통신망의 건설·운용 관리권마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곧 '통신주권의 포기'와 하나도 다를게 없기 때문이다.

등록요건 철폐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당국에 등록을 필하여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파악과 이들이 허가된 사업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을 할 때 이를 규제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은 이러한 등록요건을 아예 폐지하라고 요구해왔다. 협상에서는 국내에서의 DB/DP사업은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국제 DB/DP는 93년까지 폐지를 검토하며 나머지는 등록제를 따르기로 하는 절충선에서 일단락되었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따로따로 해야했던 등록신청, 회선신청, 약관승인신청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되었다. 미국이 이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배경은 우리의 등록제도가 사실상 면허제도와 같은 것으로 미국기업의 한국시장 참여를 제한하며 등록할 때 요구되는 사업개요라든지 설비개요 등등의 서류가 영업비밀을 사전에 누출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무슨 사업을 의도하고 있는건지 엄연히 국민의 대표집단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자국기업의

이익에 장애가 된다고 하여 이 법의 개정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이미 협상의 차원을 지나 내정간섭에까지 이르고 있다.

투자제한 철폐

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외국자본이 전체지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국내사업자를 외국자본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의 기술적, 사업적 환경에 따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며 내부에서 개정 요구가 발생하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50%의 외자참여 제한이 '상호호혜적 시장접근'을 제한하며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의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협상중에 미국은 92년부터, 우리 측은 94년부터 투자제한을 전면개방하자고 옥신각신한 끝에 일단 94년으로 하되 10차 협상 이후에 추가로 협상을 하여 더 앞당길 수도 있도록 하였다.

전용회선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10차협상의 결과로 92년 12월까지 공동사용의 자격을 자본금 10%이상의 계열회사 상호간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관계를 갖고 있는 총거래고 5%이상인 회사 상호간에까지 완화키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전용회선에 각종 교환장비나 MUX등을 부착시켜 회선의 재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외망을 사용하지 않고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바이패스가 가능해지며 이들이 이를 사업으로 한다해도 감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의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설비의 재투자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이 외국업체에게로 빠져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통신회선과 설비는 기본적으로 공중통신을 이용한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에 따른 이익은 전기통신의 공공성적이고 보편적인 제공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거나 이용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전용회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이용요금을 [회선설치 원가에 기초]하도록 하며, 현행 우리의 공동사용제도를 아예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의 부담으로 건설되어온 통신망을 미국이 원가만 달랑 지불하고 맘대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무임승차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공정경쟁 보장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주장한 또 하나의 내용은 통신사업을 하는데 있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요구한 것이다. 즉 부가통신사업자가 공중통신망에 자유로이 접속하여 공중통신망이 제공하는 통신망서비스를 다른 국내 사업자들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란 내용이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수요와 시장규모가 증대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도 늘어나자 이러한 공중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조건으로 공중망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일본, 미국에서는 각각 ONP, OND, ONA 등과 같은 공개망 개념을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서비스를 사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간의 차별방지와 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공정경쟁 규칙을 제정한 바있다. 미국은 자국 통신사업자가 한국의 통신시장 참여시 차별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공정경쟁규칙을 제정할 것과 이의 감독을 위해 통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측 정부는 ONA를 본따 ONSP 란 이름의 공개망 규정을 92년 12월까지 만들어 놓기로 약속하고 지난 3월 통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처럼 꾸미고 있는 통신위원회가 사실은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것에 다름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요구사항은 미국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때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지시사항에 다름아니다.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술수준이 낮고 사업경험도 적어 아직 공개망 규정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많은 운용경험과 실무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미국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 틀림없다.

② 정부조달

미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정부의 모든 구매과정에서 미국 공급업자들 및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업자들에게 공평한 구매 기회를 부여하는 경쟁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조달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사항은 한국정부,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주)를 망라한 한국의 조달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부조달은 규모 자체가 클 뿐아니라 전략적 측면이 강해서 조달을 하는 기관의 공공적 성격뿐아니라 한 국가의 전략적 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이라는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각종조건을 붙여 구매함으로써 외자조달에 비해 내자조달을 우선해왔다. 미국이 이를 요구한 배경에는 한국정부가 국산화나 국산부품의 비율등을 내세워 국산품을 외제보다 우선 구매하고 특히 외자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이나 투자를 강요함으로써 물건만 달랑 팔아먹을 수 없게 하고 있어 국산품과 자신들의 제품을 동등한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시켜 구매하란 얘기이다. 우리의 통신산업이야 어떻게 되든 자국의 제품만 많이 팔아먹으면 된다는 논리이다. 협상결과 조달 대상기관으로

는 조달청과 한국통신, 체신부로 하고 대상물품의 범위는 사무용품, 연구용 장비등의 일반물품에서부터 통신망 장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물품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적용시기는 일반물품이 92년 1월, 통신망장비는 9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되었다.

협상중에 정부는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과 데이콤, 한국이동통신(주)를 조달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려면 미국의 기간통신사업자인 AT&T와 지역전화회사인 BOC들도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보기좋게 거절당했다. 이 댓가로 데이콤, 한국이동통신(주)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위치나 구매규모를 볼 때 실질적으로는 국내 통신기기 구매시장 전체를 개방한 것과 다를바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즐겨 쓰는 [상호호혜적..]이란 표현이 얼마나 일방적이며 자국이기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말인지 알 수 있다. 결국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말하는 "상호균등한 시장 참여기회의 확대"에 있다기보다는 자국의 문은 굳게 걸어 잠근채 우리의 구매시장 전체를 강압적으로 열게 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통신망 장비의 구매는 수의계약으로 조달되어 왔다. 이는 우리의 전략적 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 국산품 우선 사용을 통해 어느정도 자체 지원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93년부터는 국내에서 개발된 장비라 하더라도 구매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더이상 국내 제조업체의 보호육성이 어렵게 되었으며 외국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기술이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동안 조달시의 기술이전 조건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술을 이전받을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미국은 통신망장비까지 '공공구매에 대한 공정한 참여'를 보장받게 되었고 향후 4~5년이 지나면 기술에서나 개발투자액에서나 열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국산품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통신기기를 생산해왔던 중소기업뿐아니라 대기업까지도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내 통신산업은 괴멸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연구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생산된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될테니까 제조업체들은 더이상의 개발 투자를 못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투자의욕을 상실하여 외국제품의 수입판매에만 몰두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곧 국내 기술과 시장의 종속을 의미한다.

③ 표준부문

표준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통일된 표준은 국내시장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국내표준을 제정할 때 자국업체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중추신경이 될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제정에도 미국인을 참여시키라고 요구하여 우리정부의 동의를 받아냈다.

국가기간전산망 표준에 참여하고자하는 미국의 의도는 첫째, 이 전산망사업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국가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국가기간전산망이 어떤 통신방식을 쓰고 어떤 구조로 구축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향후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장을 공략하는데 이를 가장 중요한 통신망의 중계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외에 '외국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하여 자국제품이 한국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한국의 시험기관에서 시험당하는 폐(?)를 끼지지 말고 단지 자국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증명서만을 믿고 그대로 국내 시장에 유통시키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제3단계 : 후속 조치('92년 2월 이후)

88종합무역법이 규정한 최대한의 협상시한을 모두 채우고난 10여차례의 협상결과에 만족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을 해제하게 되었다. 이로써 의무적인 쌍무협상은 종료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에도 계속 한국측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 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쌍무협상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어내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종합무역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측간의 합의를 토대로 협정의 이행여부와 새로운 개방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후속조치에는 한미통신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한미간의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정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정경쟁 보장제도의 시행과 그 효과에 대해 협의하고 양해각서상의 추가 검토사항등에 대한 협상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협상대상국 해제 이후 첫번째 열린 지난 6월 협상에서 미국은 10차협상때 요구해왔던 이동통신, 위성통신등에 대한 개방을 촉구하고 그동안 언급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개방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그것은 다름아닌 기본통신서비스를 개방하라는 것이었다. 그럼 이들이 요구해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자.

장거리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자의 수를 제한하지 말라
국내/국제통신망 건설 · 운용과 현존 망서비스의 재판매를 허가하라.
장거리통신서비스에 외자참여 제한을 철폐하라.
공중통신사업자의 서비스와 망에 대한 투명하고도 무차별적으로 원가기초요금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협정을 제공하라.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등록절차를 만들라.

이러한 요구사항은 시외전화, 국제전화서비스에 제한없는 시장접근과 본국대우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미국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통신망을 건설하고 모든 종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란 얘기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통신주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예초에 미국이 요구한 대부분의 내용을 다 수용해주었는데 설마 우리의 중추신경까지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하며 오랫동안 설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던 내용이 드디어 현실로서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어쨌거나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한 몇년내에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수용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 한미통신협정의 의의

지금까지 10차 통신협상의 결과로 한미양측에 의해 합의된 통신서비스와 정부조달에 대해 주요 협상내용과 후속조치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향후 모든 산업의 하부구조가 바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함을 인식할 때 이번 한미통신협정은 곧 '우리 주권의 포기'로 보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언급된 것 이외에도 더 심각하고 굴욕적인 많은 합의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부가 회의록과 합의문등 1차 자료를 비밀문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에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시장개방은 당국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한미 양국간의 무역마찰만의 결과는 결코아니다. 경제적 차원을 넘어 기술, 정보 및 통신망의 종속을 통해 국가안보와 통신주권을 결정적으로 침해받게 된다는 점에 그 심각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이번 협정은 전략적 중요성과 성장잠재력이 무궁한 우리의 통신시장을 초기단계부터 장악하여 영구히 자신의 영향권하에 두고, 한국을 저들의 대륙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음흉한 음모가 우리 정부를 통해 관철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3.2.5. 한통 노조원이 보는 접속료 부과

요즘 하이텔 접속료 부과 문제로 한통이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통노조원인 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왜 한통에 민주노조가 들어섰는가. 왜 95년 투쟁에서 정권이 한통노조를 국가전복세력이라 했는지 알 수있을것 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부터 였습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 각 나라에서 기간산업으로 간주하고 거의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개방의 방법으로 중요한것은 통신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을것, 통신에서 회계분리를 할 것(회계분리라 함은 국제,시내,시외,데이타통신 등을 쪼개어 한쪽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곳에서 보전할 수 없도록 하는것임), 경쟁사를 만들어 후에 미국기업이 경쟁사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것등 입니다.

물론 이런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크게 반발하였고 아직도 대부분 국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의 협상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볼때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한것 같습니다.

그 첫번째 조치가 데이콤의 민영화 및 국제전화사업의 시작이었고 최근의 시외전화사업 및 하이텔 접속료부과등도 통신개방의 사전작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통신개방의 문제는 어떤것일까요 ?

■ 통신분할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있는 통신분할에 대하여 정부는 서비스별 분할(시내,시외 ,국제,정보통신 등) 내지는 지역분할(서울,부산,경기,....)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의 분할이든 흑자와 적자보는곳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통신분할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되는 부분 즉, 흑자나는 부분에만 자신들이 침투하겠다는 것 입니다.

- 먼저 기능별분할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

한국통신의 투자중 약 70%는 시내전화망 건설 및 유지관리에 투입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제 및 시외전화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전화망 건설 및 유지관리에서 나오는 수입은 한통수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내전화사업은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적자를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의 흑자에서 보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분할로 회계가 분리된다면 시내전화의 경우에는 적자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114번호안내등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도 유료화가 불가피 합니다.

- 지역별 분할은 어떨까요 ?

지역 분할이라함은 서울,부산,경기,전남등 각 지역별로 쪼개어 개개의 사업소별로 회계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한국통신에서 흑자를 보고있는 곳은 서울,경기,부산에 불과합니다.이 말은 지역별로 분할시 몇 곳을 제외하고는 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경쟁방식의 문제입니다.

통신에서 경쟁이란 시설이 완비된뒤에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피를 빠는 거머리식의 경쟁입니다. 통신을 도로에 비유한다면 어느 기업이 고속도로를 놓았는데 경쟁기업은 톨게이트만 하나 빌리는 식의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만 빌린 기업은 도로건설에 투자한 돈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싸게해도 이익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톨게이트 임대료가 건설원가를 감안한 액수라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체계는 그 보다 몇배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몇몇 경쟁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미국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는 회의를 하곤한다. 장차 미국놈이 경쟁에 들어올때도 지금의 국내 경쟁업체와 똑같은 특혜를 주어야 할텐데 왜 이런방식의 경쟁을 고집하는지 한심합니다. 경쟁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현재 거의 외국통신회사의 대리점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국회사가 들어올때 국민적감정을 고려하여 자신들을등에 업고 들어올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그렇다면 확실한 경쟁체제와 경쟁력을 갖출만한 시설을 완비한 회사를 만들면 될텐데 돈에만 눈이 먼 기업들은 아예 시내전화사업에는 눈조차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즉,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러한 것 입니다.

시내전화사업에는 선로 및 기계시설등 시설투자에만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빌려 돈이되는 사업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경쟁은 바로 국제 및 시외전화 요금인하를 보다 시내전화요금 및 기타 통신요금의 인상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농산물 과 통신개방의 아이러니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해 통신은 시장을 개방하면 역으로 통신요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통신을 이용하는 고객이 내는 요금과 한통사원을 피말려 통신개방에 대비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는것 같은데 옳은 방법일까요 ?

■ 민영화 문제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통신시장개방에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도 포함되는데 민영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먼저 한통사원들의 고용불안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죽으나 사나 돈이 안되는 시내전화사업을 붙잡고 시외나 국제에서 그 적자를 메울길이 없을때 회사(정부)가 취할 행동은 뻔합니다.나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폭 축출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요금인상 혹은 과감한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전 직장에 있을때 미국이나 일본을 돌아다닐 기회가 많았는데 통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일본에서도 기계식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되지 않은 곳의 투자는 극력 꺼리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이 안되는 곳에 투자할 리 없으므로 중소도시나 시골의 통신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전화국의 경우에는 가입자수가 겨우 1만명에 불과한 군단위의 전화국인데 적자는 한달에 1억원 정도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구 20만이상 대도시의 경우 부터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적자가 나는 이유는 전화이용에 비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인데 인건비만 절감한다고 얼마나 원가가 줄여질까요 ? 과연 민간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런일을 할까요 ? 결국은 비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것입니다.민영화방식 에서 보자면 한국통신의 주식을 좌지우지하는 재경원에서 전량을 공개입찰방식으로 팔아 국가수입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며 정통부에서는 팔긴팔되 30%정도는 남겨 자신들이 끝까지 한통의 경영권을 쥐고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쪽도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로 주식을 팔겠다는 의미는 최대한 비싸게 주식을 팔아 국가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두번 돈을 거두어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가가 계속 유지되려면 한통이 내는 이익은 계속 한국통신의 내부에 유보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95년 한통이 소유한 이통주식 매각대금도 정부가 꿀깍해버렸는데 이런식으로 유지될때 과연 한통주식의 주가가 상승할까요? 지금까지 이따위 통신정책으로 통신을 파탄시켜온 장본인인 정통부가 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간섭을 하겠다는 것은 관료주의의 극치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 통신의 대외종속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통신시장의 개방 뿐만아니라 교환기마저 강매하려고 한다. 설명인즉, 교환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데 하드웨어가 구성되면

소프트웨어는 버젼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결론으로 한 번 교환기를 들여오면 계속되는 소프트웨어 버젼업과 부품등으로 계속 코가 꿰일 수 밖에 없으며 결국은 그 제품을 계속 울며겨자 먹기로 써야만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혜적으로 국제,시외전화사업을 미국기업이 장차하면 한국의 모든 통신업체를 고사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하이텔접속료의 유료화는 모든 무료서비스를 없애고 기간통신업자의 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통신개방을 쉽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에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콤이 국제전화사업을 시작할때 당시 이러한 미국과 정부의 의도를 간파한 노조원들이 어용노조의 사슬아래서 요금차등 반대를 외치다가 전국방방곡곡 오지로 강제로 전출당한 사건을 발단으로 한국통신의 민주노조는 태동되었으며 이후 조합원 대다수가 그러한 진실을 알게 됨에따라 한국통신의 민주노조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노조는 경쟁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정당한 경쟁이어야만하지 이런 특혜적인 경쟁은 단호히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는 한통노조가 눈에 가시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 임투중 "국가전복"이라는 엄청난 죄명까지 씌워가면서 탄압을 했고 지금도 극심한 탄압에 몸서리가 처질 지경입니다. 더 낮은 통신비용,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위해서는 정당한 경쟁이 필요하며 정당한 경쟁은 한통의 경영이 자율화 될때만이 가능합니다.

95년 투쟁시 "시외전화요금 30%인하"를 캐치플레이로 했던것도 국민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했던것 입니다.

정통부 관료들은 미국과 재벌의 로비에 한없이 약합니다. 한통이 홍보물하나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간섭을 받는다면 어떻게 질좋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통신인 여러분 ! 앞으로도 우리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통신정책에 대해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쟁한다고 해도 통신인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바라는 싸고, 질좋고, 모두에게 혜택을줄 수 있는 통신의 구현을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3.2.6. 전화요금에 관련된 주장

■ <초점> 통신요금 어떻게 봐야하나 (등록자 : ZSKPC)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인프라중 하나인 통신,즉 전화.무선호출 (삐삐),그리고 비즈니스맨의 필수품인 이동전화의 요금은 과연 적정 수준인가. 국내 통신요금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는 말은 가끔 들리지만 구 체적으로 어떤 요금이 얼마나 비싸고 서비스의 수준은 어떤지도 일반소비자가 알 길이 없다.우리나라의 통신요금,특히 전화요금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본다>

지난해(93년) 국제전화요금이 5~7% 인하된데 이어 올(94년도)들어지난 7월에도 시외전화요금이 거리에 따라 44~53%나 내려갔다(시내 전화요금은 3분 한통화에 30원에서 40원으로 올랐다).무선호출이용료도 이달부터 10%정도 인하됐다.

통신요금이 한꺼번에 이 정도 내렸으면 정부나 통신사업자들이 생색낼 만도 하다..그리고 통신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고 말한다.그러나 이같은 단순한 숫자 늘어놓기로는 통신요금이 정말 싼 것인지,아니면 더 내려도 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이동전화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면 아직은 적자인 것이 확실하나 무선호출은 수도권 제2사업자들이 사업개시 1년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사실에서 가입자당 월 3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잠정추정할 수 있다.

월이용료의 3분의 1 가까이가 사업자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엄청난 고수익률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유선계 일반전화의 경우다. 우선 1백명당 전화보급률 35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총생 산(GNP)중 전화요금 지출비율이 2.05%인데 비해 미국이 1.75%,일본이 1.61%여서 국내 소비자의 전화요금 부담이 선진국보다 크다.이 정도면 0.3%포인트정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보고 GNP 7천달러기준 4인가구가 1년에 6만7천원정도 더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나 당국은 복지통신의 척도인 시내전화요금의 경우 우리가 월등히 싸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한국통신은 지난 92년 기준 시내전화의 경우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원가의 6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작년초 한통화25원에서 30원으로 올렸고 올 7월 다시 40원으로 인상해 17개월간 60%나 요금을 끌어올렸다.

한국통신은 요금인상과 시내전화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익증가율(18.1%)이 비용증가율(7.2%)보다 높게 됨으로써 시내전화에서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체신부는 7월 요금조정에서 시내요금은 올랐지만 시외요금이 대폭 인하돼 오히려 연간 4천2백억원의 수익감소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내.시외.국제전화를 통틀어 92년은 평균 1백34. 3%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고 93년에도 원가보상률이 여전히 1백33.1%를 기록한 것을 보면 시외.국제요금이 내려가도 시내요금이 올라 전체 수지타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외전화와 국제전화가 원가의 1.8배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단순한 요금인하가 한국통신 전체에 큰 재정압박을 주지 않는 다. 전문가들은 한국통신이 작성한 원가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익을 의도적으로 분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방만한 경영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

첫째,내부투자수익률이다.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그 다음해 내부투자수익률로 가정, 다음해의 모든 비용을 이에 맞춰 부풀린다.자연히 비용은 늘고 수익은 준다는 것.

둘째,각종 연구개발기금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신부가 챙겨가는 '통신사업특별회계보증금(통특보증금)'의 문제다.93년 체신부는 한국통신 수입의 9.5%에 해당하는 1천2백11억원을 가져갔다 이는 한전등 다른 정부투자기관이 5%안팎인 것에 비해 비율에서 2배 가까운 규모다.

셋째,체신금고의 이자를 들 수 있다.국민들이 낸 전화요금은 최종적으로 체신부가 관리하는 체신금고에 들어와 한달정도 머무르다 한국통신으로 간다.이때 한국통신에 지불하는 이자는 물론 없다.이로 인해 연간 3백30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한국통신 수입에서 깎이는 셈이다.

그러나 우체국이 금고업무를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받는 위탁수수료만 93년에 7백24억원이다.

이같은 느슨한 조직경영으로 종업원수 6만명인 국내 최대규모기업의 1인당 연간 매출액은 고작 8천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비효율성,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원가관리의 원인을 체신부와 한국통신간의 물적.인적 유착관계에서 찾고 있다 즉, 체신부가 한국통신을 '돈줄'로 쥐고 있다는 것.체신금고를 통해 연간 1천억원,통특보증금 1천2백31억원,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지출되는 정보통신 유관기관 기부금 7백38억원등 거의 3천억원에 달하는 돈이 한국통신에서 체신부로 넘겨진다.

이 돈은 국민이 지불하는 통신요금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덩치라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체신부.한국통신간의 끈끈한 인적 유착관계다. 역대 체신부장관과 한국통신 사장은 '특수한 관계'로 이어져왔다. 한국통신 집행간부나 관리급 직원의 90% 이상이 체신부 출신이다. 체신부와 한국통신의 이같은 인적 유착관계는 공정경쟁의 틀을 무너뜨리고 원활한 시장기능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특집> 통신요금 외국의 사정

통신선진국인 미.일.영 등 외국의 사정은 어떤가. 일본의 원가분석과 요금규제는 우리만큼 오리무중이고 전적으로 우정성의 관할권안에 있다.이에 비해 영국은 통신규제청(OFTEL)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반독점위원회의 강력한 규제가 있어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없다.그러나 요금과 원가에 대한 규제가 가장 확실한 국가는 미국이다.

경제대공황이 한창이던 1934년,미국에서는 피폐된 경제재건을 위해 국가차원의 통신정책수립과 규제목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족됐다.이후 규제기관 FCC와 통신사업자인 미국전신전화회사(AT&T)의 원가 및 요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이듬해 당시 FCC위원장 이름을 딴"워커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는 AT&T의 원가구조는 물론 자본구조,계약관계,회계제도 등을 망라한 최초의 보고서였지만 다음해 AT&T의 적극적인 로비로 이 보고서에서 알맹이는 모두 빠졌다. 이후 FCC는 한편으로 AT&T와 타협하고,다른 한편 과학적 원가분석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했다.이 과정에서 얻어진 원가산정방법 및 정교한 분석기법들은 50년대 이후 정책변화를 주도한 주된 요소가 됐다.

FCC는 항상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질서유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현재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다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원가자료로 자신의 신규서비스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기관들이 요금관련 원가분석에 개입하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공공서비스만 전담하는 주규제위원회(PUC)와 의회내 회계감사원(GAO)이다. PUC는 오로지 주의 시각에서 질좋은 서비스가 적정한 요금에 제공되는가를 검토하며 때때로 발생할지 모를 FCC 독주를 견제한다.PUC의 핵심위원들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사로 구성돼 있다.지자제를 앞둔 우리로서는 한번 고려해봄직 하다. 요금과 원가관련 미국 통신정책은 어느 특정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돼 있다.항상 관련기관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최선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뿐이다.

■ 전화 시분제 철폐론

전화요금을 다시 한 번 올릴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위대한 정권의 위대한 비리는 국민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

전화 요금은 분명 오를 것입니다. 국민이 아무리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물가가 아무리 급상승을 해도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10여 퍼센트인상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거두어 들이는 것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상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전에 개통된 고속도로의 확장을 기화로 그들은 50퍼센트라는 요금 인상을 단행했읍니다. 단 20여 킬로미터도 안 되는 구간을 넓혀 놓고 그런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에서는 여전히 짜증나는 체증이 계속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정부 스스로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얘기 하는 입에 발린 공무원의 솔선수범은 무엇입니까? 전 국민을 대신해 물가상승을 주도해 가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생기는 군요...

시분제가 재 인상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읍니까? 그들이 처음 시분제를 실시할 때

주장했던, 정보의 보다 광범위한 확산이나, 정보의 보다 많은 공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요금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정말 부당한 행위라고 분개하십니까... 대한민국 제일 통신 사업자..한국 통신(KT)....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이 위대한 국영기업을 감히 무례하게스리 개떼라고 부른자가 있읍니다. 왜 이들이 개떼라는 오명을(자업자득이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도...) 쓰게 되었는지이제부터 어렴풋이나마 감을 잡아 봅시다.

시분제를 실시하면서 체신부와 개떼가 주장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비중을 차지 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었습니다. 흔히 할 말이 없을 때 사용되곤 하는 이 단어.....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렇다면 과연 개떼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본 자가 누구인지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 전전자 교환기의 필요성은 인정하고서도구태여 반전자교환기를 설치했는가?

80년 당시에 등장한 우리의 위대한 민주적 군부는 전화교환 설비를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고서 전자교환업종을 중화학 투자 조정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일한 전자교환 기종을 2개업체가 공동 생산할 경우 시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자원의 낭비및 특정분야에서의 과당경쟁으로 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미명하에 삼성 반도체통신, 금성반도체, 동양정밀, 대한통신(현 대우통신)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4개 업체 모두에서 납품된 교환기는 대부분 반전자식 교환기였다. 전 전자식의 경우 제는 그의 10분의 1정도였다. 왜 바로 전전자식으로 교체하지 않았는가.... 왜 굳이 반전자 교환기를 거쳐서 멀고 힘든 길을 돌아가야만 했는가... 당시 농촌에는 이미 전전자교환기로의 교체가 거의 이루어 졌으나 금성과 삼성이 납품한 도시 제1기종과 제2기종은 대부분 반전자식이였다...이들은 당시에 이미 전전자교환기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엄청난 비리와 엄청난 뒷돈 왜 그 댓가를 무고한 백성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어 왔읍니다. 우리는 집권여당의 뒷돈을 대주기 위한 이따우 처사에 강력히 투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당시 한 회선당 신설 및 증설 비용은 AXE-10이 267불, TDX가 200불선이 적정 가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위대한 (정의사회 구현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던) 정권은 아주 합리적인 구매를 했다. 아주 합리적인....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아무말도 못할 정도의...금성과 삼성의 M10CN, N0.1A의 경우 5백 75만 회선이 회선당 340달러에 계약되었다. 즉, 적정 가격인 200불보다 140불이 과잉 지출된 것이다. 이 경우 고가매입 총액은 '575만회선 * 140불 * 700원 (당시환율) = 5,635억원'이 된다. 또한 AXE-10 의경우 1984년 이후에만 125만 회선이 공급되었다. 이 경우의 고가 매입 총액은 '125만회선 * 69달러 * 700원 = 603억원' 으로 총 고가 매입액은 6천 2백 38억원에 이르고 있다.

88년 국감에서 김정길의원의 이러한 집중 추궁에 정부의 높은 자는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필요한 것'이라며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원가계산함으로써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일부를 다시 정치자금으로 받았건,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빼돌려서 정치자금 으로 썼건, 엄청난 흑막 속에서 지금도 그러한 뒷거래는 계속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시분제 실시는 부당한 처사이며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회선의 공평한 이용 이라는 말을 지겹게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 도단이며 엄청난 착오이고 국민을기만하기 위한 위선적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누가 수익자인가? 우리가 그 떼거리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이 무었이 있었나?우리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도 무사한 패거리들의 정치 자금을 대어 주기 위한 체신부와 개네들의 망발과 시대착오적 추태의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익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회선상태가 깨끗하길 한가... 미니텔과 같은 서비스가 있길 한가... 그렇다고 우리가 시분제 실시시에 좋은 예가 되었던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이길 한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말만 번질한 기만적 망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 부당행위에 대해서 투쟁합시다.

위의 글은 91년도 옵서버라는 잡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의 객관성을 자신합니다. 다만 일부 저의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결론은 부당한 정권의 앞뒤가리지 않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수작에 의해 야기된 결과의 책임을 과연 국민에게 떠넘겨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은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통신인의 통신권이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통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단을 통해, 편협했던 정보의 소유와 지엽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넓은 터전 위에서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나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과 비인간적인 기계를 통해서 실추된인간성의 회복을 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일부의 몰지각한 통신인들의 몰상식한 행위로 세인의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용한 수단을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무리들로 인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읍니다..

시분제철폐를 위한 범통신인 연합

왜 아직 이런 기구가 없는지 아쉽기만 하군요.... 이 밤... 모뎀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여러분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추신 : 혹시나 한국통신이라는 곳이 민영기업인줄 아시는 분이 계실까덧붙입니다. 민영화라는 얘기로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술책이었읍니다. 그들은 국영기업으로는 도저히 부당한 요금을 갈취할 수 없을 것 같자 과감히 국민을 속이기로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이름도 바꾸고, 마크도 바꾸었 지만 그들은 엄연한 국영기업입니다.

2.3.3. 01410 사태를 바라보는 정보연대 SING의 입장

데이콤이 한국통신 측에 01410 패킷망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대해 불공정 거래로 제소하였다. 그 동안 부과되지 않던 01410패킷망 사용료가 부과발표가 나왔다. 이용자들의 거센 항의가 일어 났다. 01410패킷망 요금부과가 연기되었다.

패킷망 요금 부과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한 자신의 서비스의 사용요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합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계산되는 사용요금에 의해서 결국 어떠한 서비스의 개선없이 망사용료를 기존의 전화사용료에 덧붙여서 내게 된 것이다. 또한 요금을 부과한 한국통신측은 충분한 홍보를 거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분노를 샀다.이용자들은 통신망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과 서명운동 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다. 또한, 한국의 통신망의 요금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01410비상대책회의는 탄생하게 되었다. 01410대책회의 요금인상의 단순한 무효화가 아닌, 이번 패킷망 요금 부과체계는 데이터통신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반영하며, 통신망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통신 이용자의 주장은 요금부과 백지화라는 측면으로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요금 인하 주장이 진정한 의미의 사용자운동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이익집단의 주장으로 윤색되기 쉽다는 점이 안타깝다.그 근거는 요금 부과 무효화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통신을 장시간 사용해왔던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 봤을때 소수이며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용자 운동이 단지 이권 주장이 아니기 위해서, 또한 통신인들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이용자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에서 정보화에 대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

01410 패킷망 요금부과 결정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그간 데이타 통신망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드러낸 문제이다. 데이타 통신요금에 대한 일관된 합의 체계가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서 데이타통신요금의 일관된 체계를 사용자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금체계의 합리화 과정에서 지켜야할 보편적 접근을 위한 요금 수준의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민간단체, 기업이 동등하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망에의 불평등한 접근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01410 패킷망 요금 부과로 인해 지금까지 직접접속 번호를 사용할 수 없었던 지방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더욱더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01410망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면 01410망을 대폭강화하여, 01410의 원래의 취지인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값싼 패킷망의 의미를 되살림으로써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통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용자가 기업, 정부와 동등하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사안을 이해하고, 대책회의에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각 통신망에서 대책회의는 자신의 위상을 이용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향후에도 통신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이용자운동의 과제를 01410 패킷망 요금 부과에 따른 제반 사태를 통해 생각해보자. 이번 01410 패킷망 요금 부과로 인하여 많은 통신인들의 격론이 오갔던 보편적서비스는 이용자운동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혹은 보편적 정보접근)에는 저렴한 이용요금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광범한 범위의 내용이 녹아들어 있다.

1) 경쟁체제속에서 망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경쟁체제화를 고려할때)
2) 기업,혹은 정부의 독주,독재를 사용자의 운동을 통해서 견제해야 한다.
3) 정보망에 있어서 개방성을 유지함으로서 서로다른 전송망을 사용하는 수많은 네트웍이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해야한다.
4) 이용자는 단지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용자가 되어야한다. 이것은 사용자,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회사, 정보제공자들이 대칭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5)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보장으로 장애인, 언어장벽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6) 망사용에 있어서의 지역간,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7) 정보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의 집중도의 격차가 심화되므로, 교육이 절실하다.

여러가지 문제를 외면한채 이용요금 인하라는 측면으로만 이용자 운동이 전개되었을때, 단기간의 싸움속에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통신환경이 점점 열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데이콤의 이번 한국통신에 대한 제소는 국내의 통신 사업권 내에서 한국통신의 독점적인 폐해의 일각을 건드린 사건일 뿐이다. 현재의 통신 산업구조로는 경쟁체제로 가더라도, 한국통신의 독점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그 근거로는 1)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의 독점적인 보장, 2) 제2, 제3 사업자가 진출하더라도, 결국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망을 결국 사용하므로 경쟁체제에 의한 효율을 충분히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통신에 대해 시내 전화망을 임차해서 쓰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국통신이 시내전화망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한 채 민영화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여기서 하나 확인 하고 넘어가자.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반드시 공기업의 형태로 통신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2공기업은 아니었지만, 시내전화를 독점하고 있던 거대한 기업 AT&T를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반독점법으로 해체명령을 내리면서 7개의 지역 전화회사와 1개의 시외전화회사(AT&T)로 분할 하였다. 일본의 NTT도 최근 시내전 화사업을 지역단위로 분할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경우 시내전화사업이 분할 경쟁체제로 가면서 요금이 인하되었고(시내정액제 약 2~3만원), 일본은 독점체제 속에서의 효율성의 문제로 분할하게 된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역독점체가 나타나지 않도록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경쟁체제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시설투자를 촉발시키며, 민간영역의 카운터파트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만한 다면, 법적인 규제의 형태로 공공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한국통신의 향후 민영화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한국통신을 분할 매각하는 등의 형태로 모든 통신 사업을 경쟁체제화하고, 분할 매각하는 자금을 통해서 국가 기간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수하는 기업측에는 매수 조건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이루기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업에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민영화의 방식이 대기업에게 한국통신을 나눠팔기식이어서도 않된다. 국민주 형태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등의 민영화의 방식이 문제이다.
정보연대 SING은 01410패킷망 사용료 부과에 의한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 증가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정보이용의 있어서의 지역적 편차의 증가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데이콤등의 패킷망 사업을 하는 제2, 제3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인정한다. 이제 대책위는 한국의 통신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이용자의 입장을 재정립해야한다. 그것은 통신상의 01410 패킷망 요금 부과 논의를 확장하여, 한국의 통신환경 전반의 논의로 확대시키며, 패킷망의 공공성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요금인하 외의 다른 부분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시민 단체는 이러한 이용자의 주장을 아울러, 정부, 기업, 이용자, 시민단체가 같이 하는 토론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민간영역의 활발한 정보화 정책의 참여만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 정보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올바를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01410 사태로 촉발된 이용자의 논의 과정과 행동은 이용자운동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만하다. 그간의 관심이 여러 이용자의 흥분 속에서 다소 감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냄통신인 연합의 형태로 조직화해서, 지속적인 정보 정책 제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2.4. Copyleft운동을 제안하며

2.4.1. COPYLEFT에 관하여 (글쓴이 : 이 혁)

다른사람들의 발명으로부터 큰 이득을 누려왔듯이, 우리가 발명을 함으러써 다른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기꺼이 해야 한다.
- 벤자민 플랭클린

"As we enjoy great advantages from the inventions of others, we should be glad of an opportunity to serve others by any invention of ours"
- Benjamin Franklin

■ 들어가며

작년 한해 동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웠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지적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어김없이 내려졌다. 지적 소유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토지, 물건등에 대한 소유권처럼 당연히 여겨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책들 앞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간다.

"출판사의 동의 없이는,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어떤방법으로나 어떤 수단으로나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이다. 난 이 책을 읽고 이책의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려야한다. 내가 글을 쓰면서 이 책의 내용을 옮길 수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래선 안된다. 그 책의 소유권은 저자나 저자가 소유권을 판 출판사에 있으므로...
조금은 억측같이 들리는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지식에 소유권을 매긴다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않다. 이 글에서는 지적소유권의 부당성과 지적 소유권에 대한 대안으로써 Copyleft에 대해 알아보려고한다.

■ 지적소유권

지적 소유권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법안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프로그램 보호법 등이 있다. 발명은 특허법으로, 고안은 실용신안법으로,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그 권리가 보호된다. 먼저 특허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요즘 너무나도 당연히 특허는 개인에게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특허는 결코 개인에게 발명같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독점적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허법 1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1조)

즉, 특허권은 "모든 신규한 착상은 원래 그것을 생각해낸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공업적 발명이 그 창작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권을 그 본질에 있어서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기본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통한 공개를 장려하여 비밀을 공개하고, 발명자에게 특전을 주어 발명을 장려하고, 기업간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여, 결국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한 것이다.
저작권또한 특허와 마찬가지이다. 저작권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GNU BULLETIN(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일년에 2번내는 온라인 잡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저작권은 대중(Public)이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공공의 해악이 되자, 저작권 소유자들은 저작권을 고유한 권한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만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듯이, 그들의 고유한 권한은 공공의 이익과는 맞지않는 인습이다. 이것은 저작권의 역사에 관한 사실과는 정반대이다. 대법원은 저작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했다. 재판관 스튜워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저작권법의 즉시적인 효과는 저자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공공히 하기위함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장려로, 공공의 일반적 이익을 위한 예술적인 창조작업을 격려하기위함이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단하나의 이익과 (저작권) 독점을 언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대중에 의해 저자의 노동으로부터 뽑아낸 전체의 이익에 있다.'[FoxFilm Corp. v. Doyal (286 US 123, 127)] 그래서, 저작권이 공공의 프로그램 사용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 이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Now that copyright is becoming a public nuisance that the public tries to ignore, copyright owners try to justify this imposition by calling it an intrinsic right. As they tell it, their intrinsic right is a tradition that makes the public good irrelevant. This is contrary to the facts of the history of copyright.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explicitly what copyright was for. Writing for the Court, Justice Stewart explained: The immediate effect of our copyright law is to secure a fair return for an "author's" creative labor.But the ultimate aim is, by this incentive, to stimulate artistic creativity for the general public good.'The sol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rimary object in conferring the [copyright] monopoly,' this Court has said,'lie in the general benefits derived by the public from the labors of authors.' [Fox Film Corp. v. Doyal (286 US 123, 127)] So when copyright interferes with the public use of a program, that directly attacks the reason for having copyright.

특허권,실용신안권(권리자체가 특허권과 거의 일치), 저작권등 지적소유권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긴 권리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특허권은 20년, 저작권은 저자사망후 50년까지 그 권리를 인정해준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오래동안 독점적 권한을 준다는 것은 옳지않다. 더 나아가 그런한 지적소유권이 새로운 기술의 개발, 기술의 사회적 이용을 제한한다면 옳지않다. 더욱이 지식에 대한 소유권이 그것을 개발한 창작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기업으로 대부분 넘어가는 현실이다.

■ Copyleft

지적 소유권에 대한 대안으로서 Copyleft란 것이 있다. GNU Bulletin에 올라와 있는 'Copyleft란 무엇인가'란 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Free Software Foundation이란 무엇인가라고 제목붙여진 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은 GNU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누군가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친구의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진실로 남아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을 공공의 소유(Pubic Domain)로 두는 것이다. 그러면, 분배하는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것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 역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하는 일- 당신들의 이웃과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라이센스하에 바이너리 버전만 파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사용자들이 이러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은 동시에 자신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의 자유로움의 이익(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자유롭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이런방식으로 얻는 것은 쉽게 발생한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하려는 우리의 목표는 쉽게 손상될 것이다.

이러한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GNU 프로그램을 공공의 소유로 두지 않는다. 그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copylefts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호한다. copyleft는 모든 사람이 다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그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프로그램의 복사본과 함께 얻을 수 있는 한, 모든사람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적인 방법이다. (즉 그들은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한 자유(복사의 자유, 수정의 자유)를 빼앗는 데 저작권을 사용한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공유자들은 COPYLEFT를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GNU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COPYLEFT는 copyright notice와 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copyright notice는 일반적인 종류다. General Public License는 당신은 당신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Copying 라이렌스를 말한다.

완전한 라이센스가 모든 GNU의 소스코드 분배와 매뉴얼안에 포함된다. 만일 요구한다면, 출력된 복사복을 우리는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다."

In the section entitled "What Is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e state that "you never have to pay anyone license fees to use GNU software, and you always have the freedom to make your copy from a friend's computer at no charge."

What exactly do we mean by this, andhow do we make sure that it stays true? The simplest way to make a program free is to put it in the public domain. Then people who get it from sharers can share it with others. But bad citizens can also do what they like to do: sell binary-only versions under typical don't-share-with-your-neighbor licenses. They would thus enjoy the benefits of the freeness of the original program while withholding these benefits from the users. It could easily come about that most users get the program this way, and our goal of making the program free for all users would have been undermined.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we don't normally place GNU programs in the public domain. Instead, we protect them by what we call copylefts. A copyleft is a legal instrument that makes everybody free to copy a program as long as the person getting the copy gets with it the freedom to distribute further copies, and the freedom to modifytheir copy (which means that they must get access to the source code).Typical software companies use copyrights to take away these freedoms:now we software sharers use copylefts to preserve these freedoms.

The copyleft used by the GNU project is made from a combination of acopyright notice and the General Public License. The copyright notice is the usual kind. The General Public License is a copying license which basically says that you have the freedoms we want you to have and that you can't take these freedoms away from anyone else.

The complete license is included in all GNU source code distributions and many manuals, and we will send you a printed copy on request."

Copyleft는 지적소유권(Copyright)는 저자가 가지고, 그것을 자유롭게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Copying 라이센스를 공공의 소유(Public Domain)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는 현실에서, 소스코드까지 공개했을 때, 그것을 조금 고쳐서 만든 것에 자신의 지적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GNU 프로그램을 고쳐서 만든 것도 Copyleft로 되기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한 것이다. Copyleft에 대한 규정은 한 번 수정되어 최근에 GNU PUBLIC LICENSE와 GNU PUBLIC LIBRARY LICENSE로 구성되어있다. 통신망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리눅스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받아본다면 위의 두 문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Copyleft를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여러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도 진행중이다. 책, 참고서, 카탈로그 등을 온라인상으로 자유롭게 재분배가능하게 하기위해 The Online Book Initiative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The Online Book Initiative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Project Gutenberg, Common Knowledge등이 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미술품 사진을 자유롭게 유통하기위한 Rudenberg Project도 있다. 공공의 소유로 공개된 사전을 디지털화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나오며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이만의 전기인 "NeJohn von Neumann and the Origins of Modern Computing"(William Asprey, MIT Press, 1990, pp.41~45)을 보면 전체 공공에게 접근가능하게 기술을 가능한 남겨두기 위하여 배타적 특허권을 반대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과학, 기술, 지식은 폰노이만처럼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고, 서로 공동의 노력으로 좀더 나은 기술을 만들려 내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사회공공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적 소유권이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 - 발명가의 발명,고안이나 저자의 창작을 장려하여 공공에 이바지하려는것 - 과는 반대로 새로운 기술, 연구, 창작을 못하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CyberSpace에 관한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졸업논문 요약본을 보내면서 'copylefted by ***'라는 말을 끝에 붙인 메일을 받아보았다. 컴퓨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일반 서적들도 Copyleft로 공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작 뉴튼이 한말을 되씹으며 이글을 맺는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거인의 어깨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 아이작 뉴튼

"If I have seen fa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giants."
- Isaac Newton

2.4.2. GNU 선언문

Copyright (C) 1985 Richard M. Stallman (Copying permission notice at the end.)

GNU란 무엇인가? Gnu's Not Unix!
GNU는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며 사용가능한 모든이가 무료로 사용하도록 작성한 것이다. 몇몇 다른 자원자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많은 시간적, 금전적 지원 및 프로그램과 장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는 문서 형식기로 TeX를 사용할 것이며, nroff도 여전히 사용될 것이다. 또한, X 윈도우 시스템도 사용할 것이다. 이런 후에 Common Lisp, Empire, 스프레트시트 등과 수많은 다른 프로그램을 온라인 문서를 포함하여 추가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일반적인 유닉스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집명령을 작성하기 위한 리스프를 갖춘 Emacs 문서 편집기, 소스수준의 디버거, yacc호환 파서 생성기, 링커등 35개 가량의 유틸리티를 만들어 왔으며, 쉘(명령어 번역기)은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적화된 포터블 C 컴파일러가 새로이 제작되었으며 이번 해에 배포될 것이다. 이미 처음의 커널이 있기는 하지만 유닉스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양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커널과 컴파일러가 완성되면 프로그램 개발에 적합한 GNU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GNU는 유닉스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유닉스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운영체제에서의 경험을 살려 가능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향상을 꾀했다. 특히, 긴 파일명을 쓸 수 있게 하고, 파일 버전넘버를 달고, 견고한 파일시스템을 구축하고, 터미널 비의존적인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몇개의 리스프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유닉스 프로그램이 한 화면을 나누어 쓸 수 있는 리스프 기반의 윈도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C와 리스프 두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UUCP, MIT Chaosnet, 인터넷 프로토콜을 지원할 것이다.
GNU는 본래 가상메모리를 가진 68000/16000 계열의 컴퓨터를 겨냥하고 제작되었다. 그 까닭은 그 기계들에서 GNU를 가장 쉽게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작은 컴퓨터에서 작동 시키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심각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GNU'가 이 프로젝트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G'를 발음해주기 바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리처드 스톨맨이란 사람이며 Emacs 에디터의 고안자이다. 나는 컴파일러, 에디터, 디버거, 명령어 해석기, 시분할체제와 리스프머신 운영체제에 관해 광범위한 작업을 해왔으며, ITS에서 터미널 비의존적인 출력장치를 개발했다. 그런 다음 리스프기계를 위한 견고한(crashproof) 파일 시스템하나와 두개의 윈도우 시스템을 구현했고, 지금은 세번째 윈도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GNU는 물론 다른 많은 시스템에 이식될 것이다.

왜 GNU를 작성해야만 했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황금률(대우 받고자 하는 데로 대하라.-성서)이라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사용자를 각각 구분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사용자 서로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을 막고자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간의 결속이 깨지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올바른 양심으로 비공개 협정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에 서명할 수 없다. 여러해동안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그러한 경향과 다른 박정한 일들에 저항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다. 내의지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연구소에 나는 더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내가 계속해서 명예를 손상시키지않고 컴퓨터를 사용하기위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도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본체를 만들 결심을 했다.

유닉스와 호환성을 가지는 이유
유닉스가 이상적인 체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법 쓸만하다고 할 수 있다. 유닉스체제의 골자는 훌륭한 것이며 나는 유닉스의 장점을 해치지 않고도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유닉스와 호환을 가지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GNU를 사용하는 방법
GNU를 사용하는데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GNU를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지만 어떤이도 GNU가 보다 널리 배포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즉, 변경한 내용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모든 버전의 GNU가 공개된채로 남아있기를 보장 받고 싶은 것이다.

많은 다른 프로그래머들의 동참을 바라는 이유
나는 그동안, GNU에 흥미를 느끼고 돕고자 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이 서로를 동지로 느끼기 보다는 투쟁해야할 대상으로 느끼게 된다. 프로그래머들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프로그램을 나누는 것이다. 이제는 전형적인 핵심으로 여기는 마케팅 협정은 프로그래머들이 친구로서 다른 프로그래머를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자는 우정과 준법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물론 자연적으로 많은 이들이 우정을 보다 중요시한다. 그러나 법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냉소적이 되어 프로그래밍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 하게된다.
그러나 독점적인 프로그램들 대신 GNU를 사용하게되면, 우리는 모든이에게 온정을 가질 수 있으며 법도 준수하게 된다. 게다가 GNU는 영감을 주는 예와 다른이가 우리와 나누는 일에 동참하도록 고무하는 깃발 노릇도 한다.이는 우리가 상용프로그램을 쓸 때는 느낄 수 없는 조화로운 느낌을 갖게 한다. 나와 대화한 프로그래머들 중 거의 반정도는, 이것은 돈이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행복이라는데 공감했다.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나는 제조업자들에게는 기계와 돈을, 개인들에게는 프로그램과 노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컴퓨터를 기증해서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GNU가 머지않아 그 기계에서 작동할 것이란 점이다. 기증된 컴퓨터는 완전해 질 것이며, 따라서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를 모두 갖추게 되어 파워와 효율을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GNU를 위해 시간제로 일하기를 갈망하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그러한 시간제로 배치된 작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독립적으로 쓰여진 부분들은 함께 동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한 작업인 유닉스를 대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완전한 유닉스 시스템은 개별적인 설명이 포함된 백여개의 유틸리티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사양은 유닉스에 호환되도록 맞추어 진다. 만약 각각의 프로그래머가 유닉스 유틸리티 한개를 유닉스에 호환하도록 재구현하고 본래의 유닉스 시스템에서 충분히 작동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것들은 함께 묶어 놓아도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해도, 전체적인 구성요소들을 통합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커널을 만드는 작업은 세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며, 소수의 호흡이 잘 맞는 집단이 적당할 것이다.)
만일 내가 금전적인 지원을 얻는다면, 약간의 인원을 전시간 또는 시간제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머 수준의 높은 봉급을 줄 수는 없겠지만, 돈이 가지는 것 만큼 공동체 의식을 정립하는 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 볼것이다.

모든 컴퓨터 사용자가 이득을 얻게되는 이유
일단 GNU가 작성되니까, 마치 공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모든 이에게 유닉스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덜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드는 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신, 절약된 노력은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 될 것이다.
완벽한 시스템 소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적당한 프로그래머나 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자들은 더이상 프로그램 소스를 가진 프로그래머나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수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시스템 코드를 배우고 향상시키도록 장려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컴퓨터 연구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 소스가 공개 전시 되지 않으면 시스템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쓰곤 했다.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정책을 고수 했다. 나는 이것에서 커다란 영감을 받게 되었다.
결국에는, 누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제비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복사 라이센스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지불을 준비할때는 언제나 개인이 지불해야할 돈이 얼마인가를 알아내야 하는 필요성을 통하여 사회에 많은 비용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오직 경찰 당국 만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르게 하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기를 생산하는 우주정거장을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각각의 개인은 자신이 호흡하는 공기에 대해 리터단위로 요금을 지불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호흡하는 공기의 양을 계측하기위해 메터기가 달린 방독면을 밤낮으로 쓰고 있어야 한다면 그런 방식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TV

카메라는 당신이 마스크를 벗는 불법을 행하는지 어디서나 지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것보다는 사람수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것이 현명하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복사하는 행위는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생산적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몇가지 GNU의 목표에 대한 반대 의견

"무료라면 아무도 그것을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료라는 것은 어떠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댓가로 이에 관한 비용을 부과해야만 한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서 GNU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 희망한다면, GNU를 무료로 얻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실제 프로그래밍 작업과 단순 관리 작업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때때로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에게 의존할 수가 없다. 만일 당신의 문제가 충분한 사람에 의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회사는 잊어버리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의 사업이 지원에 대한 의존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필요한 모든 소스와 도구를 갖춰야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자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닉스상에서, 소스의 가격은 대부분 고려되지 않으며. GNU는 더 쉬울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유능한 사람이 필요 없을 수는 있으나, 이 문제는 배포에 따른 비난을 할 수 없다. GNU는 모든 세계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중 하나이다.
한편, 컴퓨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용자들은 여전히 단순한 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일은 사용자 스스로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지만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서비스들은 단순한 수작업이나 복구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제품을 무료로 받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들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광고를 하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프로그램에 가격을 매겨야 한다.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GNU 같은 프로그램을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혹은 극히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정보 전파 방식이 있다. 그러나 광고를 하는 것이 보다 많은 마이크로 컴퓨터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만일 실제로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복사와 배포를 하는데 돈을 받음으로써 능히 광고와 그외의 부수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에서는, 광고를 보고 배포본을 구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용자가 광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GNU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구한다면,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GNU를 보급하는데 광고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고한다면 무료로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료로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만한 이유가 있겠는가?

"나의 회사는 경쟁사들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점적인(고유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GNU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경쟁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될 것이다. 당신의 회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경쟁사들도 그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경쟁사들 모두 이 분야에서는 별반 이득을 볼 수 없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당신의 사업이 운영체제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GNU가 마땅치 않게 생각 될 것이다. 당신의 사업이 이런 종류가 아니라면, GNU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줄 것이다.
나는 제작자와 사용자들이 GNU의 발전에 기여해 나감으로써 서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프로그래머는 그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말한다. 창의성이란 그 결과물을 사회가 댓가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이 그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프로그래머는 그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가?"

유해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와 자신의 소득이 극대화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보편화된 수단은 유해한 방법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둠으로써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다. 이는 인간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풍요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이라면 자신이 보다 부유해지기위해 그런 수단을 쓰지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상호간의 유해한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보다 빈곤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의 윤리학이나 황금율같은 분명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보를 축적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 개인의 창의성을 보장 받고자하는 욕구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창의성이나 혹은 그 일부분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지는 않는다.

"프로그래머들의 밥줄이 끊기지 않을까?"

나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다고 답하고 싶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거리에 나가 인상을 써서 간신히 약간의 돈을 벌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겉과적으로, 우리는 거리에 나가 인상 써서 돈을 번다고 비난 받을 필요도 없고, 또한 빈궁해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으면 단 한푼도 벌수 없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독단적인 가정을 받아 들였다는 점에서 오답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극단적일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지금과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프로그래밍으로 돈을 벌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복사를 제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일한 기본 방침은 아니다. 이런 방침이 보편화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에 의해 이런 방식이 거부되거나 금지된다고 해도,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까지 혼하지는 않았던 새로운 조직체계로 전환해 나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 조직화하는 방법은 무궁 무진한 것이다.
아마 새로운 기반하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지금처럼 수익성이 높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쟁점은 아니다. 지금의 판매 사원들이 그들의 봉급을 버는 방식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래머들이 그와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다해도 하등 정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그들보다 월등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누구든 그들의 창의력이 사용되는 방법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은가?"

"인간 생각의 쓰임새를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보다 어렵게 만들곤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해 상세하게 공부한 사람들(변호사 등)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지적 소유물은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추상적인 지적 소유권들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법률 조항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는 발명가가 그의 고안품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고자 설립 적은 발명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사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특허가 갖는 17년간의 유효기간은 기술이 발전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때 짧다. 특허권은 생산업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생산을 향상 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특허권 계약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작다고 보기 때문에,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해악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특허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고대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시대에 작가들은 빈번하게 다른 이의 작품 상당량을 실제의 (허구가 아닌)작품에 복제하기도 했다. 이런 작업들은 유용한 것이었으며, 비록 그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품이 계속해서 전수 되는(존재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작권 제도는 작가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급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 질 때 주로 염두에 두었던 책의 범주에서 보면, 책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쇄기를 사용해야만 복사가능 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다지 해롭지는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모든 지적 소유권은, 그것들이 어떻던지 그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여겨져서, 사회가 허용할 때만 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런 인가를 내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떤 종류의 인가를 내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만 한다. 오늘날의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백여년전의 책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프로그램이 이웃간에 손쉽게 복사될 수 있다는 사실, 소스 코드와 목적 코드로 구분된다는 점, 읽기위한 것이 아니라 즐기기위한 것이라는 사실들이 묶여져서, 저작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전체사회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경쟁 함으로써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모범적인 경쟁 방식은 경주(race)이며, 승자에게 상을 줌으로써 주자들이 더욱 빨리 달리도록 장려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실제로 이런 방식을 따른다면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실제로 항상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단정짓는 잘못을 범한다. 만일, 주자들이 상이 주어지는 이유를 망각한채 승리에만 집한다면, 말할것도 없이 그들은 다른 주자를 공격한다든지하는 색다른 전략을 찾게 될 것이다. 주자들이 먼저 싸우기 부터 한다면, 그들은 결국 모두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독점적이고 비밀에 싸인 소프트웨어는, 도덕적으로 먼저 싸우기 부터하는 주자들과 동일 하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유일한 심판은 그다지 공정해 보이지 않으며, "매 10 야드마다 한번씩 상대방을 1가격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적용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한 싸움이 있을 때는, 그들을 떼어놓고 벌칙을 주어야하는데도 말이다.

"금전적인 장려가 없다면 아무도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금전적인 장려가 없이도 프로그래밍을 할 것이다. 프로그래밍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사람에게 더욱 그렇다. 비록 생활의 기반이 될 가망이 없더라도 꾸준히 계속해가는 직업적인 음악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질문은, 비록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 되지만,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 프로그래머들의 소득원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수입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올바른 질문은 "금전적인 보상이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까?" 일 것이다.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십년 이상 동안, 세계 정상급 프로그래머들이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했었지만, 그들이 받은 보수는 다른 어떤 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다. 그들은 명성이나 감사같은 다양한종류의 비금전적인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창의력은 그 자체 안에 보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다. 그 후, 그들 대부분은 이전의 작업처럼 그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일을 높은 보수를 받으며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연구소를 떠났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부유해지기 보다는 어떤 까닭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이며 그런 조건위에 상당한 보수까지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를 예상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보수가 낮은 조직은 높은 보수를 받는 조직과의 경쟁에서 뒤지 겠지만, 만일 높은 보수를 받는 조직과는 상호이동이 없는 완전히 개별적인 집단이라면 그들 나름대로 훌륭하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프로그래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이웃을 돕지 말라 하면 우리는 따를 수 밖에 없다."

당신들은 결코 그런 종류의 요구에 복종해야할 만큼 절박하지 않다. 명심하라. 열 장정이 도둑 하나를 막지 못하는 법이다.

"프로그래머들도 어떤식으로든 그들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지 않은가?"

요컨데 이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것 이외에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현재 사용에 대한권리를 파는것이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나 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이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 여기에 여러가지 예들이 있다.
새로운 컴퓨터를 내놓는 제조업자는 새 기계에 운영체제를 이식하기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교육, 단순 관리 작업, 지속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역시 프로그래머는 필요한 것이다.사용자의 마음에 흡족하다면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는,프리웨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그램들을 배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단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다.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들은 사용자 그룹을 결성하고 회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은 프로그래밍래밍 회사와 계약을 맺고 회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주문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발전에 필요한 기금은 소프트웨어 세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컴퓨터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격의 x 퍼센트를 소프트웨어 세금으로 지불한다면, 정부는 그 돈을 소프트웨어 발전에 쓰여 지도록 NSF 같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구입자가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발전에 공헌을 한바가 있다면, 그는 세금을 면제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어느 프로젝트에 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론 그 결과를 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품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얼마를 기부하든 지불해야 할 세금 전액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의 전체적인 세율은 납세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불할 액수에 따라 차등 조정될 것이다.

결론:

- 컴퓨터 사용자 공동체는 소프트웨어 발전을 지원한다.
- 어느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인가는 이 공동체가 결정한다.
- 자신의 몫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일 것인가에 관심있는 사용자들은 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더이상 단지 생계를 위해 고되게 일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세계로 가는 한 단계인 것이다.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같은 자신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에 자신을 몰입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될 것이다. 법률이 규정하는 주당 열 시간 정도의 시간을 마친 후엔, 가족들과 담소 한다든지, 로보트를 수리 한다든지, 천체를 관측하는 일 따위를 하게 될 것이다.
더이상 프로그래밍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우리는 이미, 실제적인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위해 전체 사회가 부담해야할 작업의 분량을 많이 감소 시켰다. 이중 매우 적은 부분는 단지 프로그래머들의 유희를 위해서 작성되었다. 그 까닭은 비생산적인 활동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경쟁을 대신할 수 있는 관료 정책이며 그와 동일한 부피를 갖는 몸부림인 것이다. 프리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생산 분야에서 생산력이 낭비되는 것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해나가야 하며, 생산성을 위한 기술 습득은 적은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Copyright (C) 1985 Richard M. Stallman

2.4.3. 프로그래머가 바라보는 Copyleft (글쓴이 : 김태욱)

안녕하세요. SING기술팀 김태욱입니다.
제가 프르그래밍을 시작한 것은 방위를 제대하고 나서 리눅스를 접하게 되고 나서부터지요. 그러므로 저한테 있어서 GNU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하게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닐 수 없어요. GNU는 GNU is Not Unix라는 어쩌면 황당한 말의 약자인데,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추진하는 공개OS제작 프로젝트입니다. Linux의 열풍은 실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93년도에는 주로 멀티비비에스(이때의 멀티비비에스는 두명이상의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사설비비에스를 일컫는다)를 꾸미고자 하는 일반사용자들에게 급속하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UNIX를 배우는 학생들이 집에서 네트워크를 실험하고 직접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리눅스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군대제대한 이후라 백수였지요) 깔고 지우고 할때에는 별로 리눅스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접했었겠지만서도요. 저는 사실 프로그래밍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그보다도 리포트나멋있게 쓰는 것이 컴퓨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신(이때의 통신은 하이텔같은)이나 좀 하면서 정보나 얻는 것이 좀 특별한 컴퓨터의 쓰임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리눅스를 접하면서 컴퓨터라는 것이 자기집에 신주단지같이 모셔놓는 값비싼 골동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물론 이것은 Linux뿐만 아니라 UNIX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통신에 빠진 것은 이보다 더 이른 92년도 부터인데 그 당시에는 밤을 새면서 온갖 사설비비에스에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사귀었지요. 그리고 93년도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군대갔다오고 난 후 사설비비에스의 매력을 잊지 못해서 나도 사설비비에스를 운영해보겠다고 비비에스 호스트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시험을 해보는데 이거원... 접속한 사람과 나 둘이서 뭐가 재미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이텔같이 여러사람이 채팅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리눅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 당시까지만해도 UNIX가 뭔지도 몰랐고. 그저..! VAX시스템이란 것이 멀티태스킹, 멀티유저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VAX시스템은 한양대에서 많이 접해보던 것입니다. 한양대

중앙전산실에서는 피라미드를 구입하기 전에 VAX를 이용했었지요)VAX시스템에서 Bitnet을 통해 여러 대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것을 생각하고 저는 혹시 이런 OS를 피씨에 깔 수 없을까생각했었지요. 그러던차에 UNIX를 알게 되었고, SCO를 한번 깔아보았지요. 후후.. 지금 생각하면 SCO를 깔고 console상태에서 멀뚱히 dir만 치던 생각이 불현듯 나네요... UNIX를 거의 구할 수 없던 차에 통신상에서 리눅스를 접하게 되었지요. 그 리눅스라는 것이 좋다고 혓바닥이 빠질 정도로 극찬하는 통신인들의 모략에 빠져서 저는 60메가에 달하는 리눅스를 하이텔에서 다운받기 시작했지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푸하하하.. A씨리즈를 받고 나서 설치를 하고 나니 SCO와 비슷한 상태였고,(왕짜증 나지 않을 수 없었음) 그래서 AP씨리즈를 도스에서 또 받고 깔고 나도 비슷... N씨리즈 도스에서 다운받고 다시 깔고... 이때부터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니... XC라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번에는 리눅스상에서 다운받으면서 공벙0E ?x 3J9+ !

기분이 좋아서... X까지 띄웠을 때에는 주무시던 어머님을 깨우고서 부둥켜 울었답니다. 물론 전화고지서 받으시고는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시더군요. 지금 제가 있기까지는 전화고지서를 받고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신 어머님 덕이 아닐까 합니다.본격적으로 리눅스를 깔고 지우고를 한 수십번 한후에 리눅스라는 것이 어떤 괴물인지 감이 오더군요. 물론 이때까지는 GNU가 뭐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었지요. 미국해커와 같이 컴퓨터에 대한 무분별한 열정으로 리눅스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호스트 프로그램을 구하기 시작했지요. 왠걸... 바라지도 않은 소스까지 덜컥 안겨주기깐 소스까지도 분석을 하게 맹글더군요... 나쁜 제작자... 그래서 열심히 깔고 나서 실행을 해보니... 음... 이것은 KIDS가 아닌가? 평소 KIDS식의 구성을 싫어하던 나로서는 실력도 없고 며칠을 운영해도 파리한마리도 비비에스에 안 들어오더군요.(이때에는 단일노드) 가끔 들어오는 사용자도 어머 이게 뭐야? 참 신선하네요. 다음부터는 안 들어올께요 하고 나가더군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한국형 비비에스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고생끝에 '모닥불'호스트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거원 컴파일이 안되니... 까막눈으로 소스를 보니 여기 저기 버그투성이...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모닥불 소스와 Pirate BBS소스를 해킹하기 시작했지요. 우기식 해킹법으로 중간중간에 printf("fucking ass hole");을 뻔질나게 집어넣으면서 에러를 수정해나갔지요. 그래서 모닥불의 게시물저장방식의 한계를 고치고, 해적비비에스의 미국형구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호스트를 만들어냈지요. 호스트 이름을 고민하다가 여후배 별명인 돌탱크를 붙이고 운영에 들어갔답니다. 해커들의 기본정신인 무정부주의 이념을 받들어 검열은 없다. 자유다... 하고 운영을 하니 벼라별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더군요.(특히 야한자료) 가뜩이나 컴퓨터 음란물이다 구속이다 하는 기사가 나와서 불안했지만 그런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운영이 괜찮다 싶을 때에 호스트를 소스까지 공개해서(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이텔에다가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서 컴파일하고 운영을 하면서 질문을 하더군요. 질문을 왜 하나 했니니 도스에서 터보씨로 컴파일하고나서 실행이 안된다고(으~)그래서 나의 리눅스 입문기를 촬촬 읊으면서 리눅스의 세계로 살살 꼬셨지요. 그럼으로써 아직도 리눅스에 빠져 절절대는 햇병아리 해커가 몇백은 늘었을겁니다. 하하하.특히 고등학생들이 아는 사람 사무실에서 자취하는 나에게 찾아와 깔아달라고 애걸을 하고 거의 사람 지겹도록 리눅스를 깔고 지우고 했지요... 비비에스 호스트를 제작하면서 다른 호스트제작자들을 약간 만났지요. 발해비비에스 만든 고등학생도 만났고, 모닥불 만든 웅필씨도 보고, 그런데 같이 호스트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하는 정보를 서로의 비비에스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소스를 배포하지 않기 시작하더군요. 에고에고. 비비에스도 잘 안들어오고... 급기야는 쉐어웨어를 표방하고... 참.. 기분이 찝찝하더군요. 리눅스를 쓰는 이유가 공짜라서였는데 그위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돈을 요구하다니(물론 이때에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졌지요) 돈 받고 파는 호스트야 상용Unix에는 엄청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Linux에서 이런 행동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GNU선언문도 읽어보고 내가 Linux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문제의식을 가져보고... 그러다보니 온근히 화도 나고 해서... 더 기능이 좋게 돌탱크를 개조해서 소스까지 공개해버렸지요. 그러다보니 돌탱크를 더 많이 쓰고, 게시판에는 쉐어웨어에 대한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앞뒤 안 맞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하하. 아직 copyleft가 성숙되지 않은 때라서 그런가보지요. 학교가 개강하고 나서 바빠서 돌탱크를 더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소스까지 공개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호스트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부담감이 한결 덜했습니다. 실로 C의 printf문이나 조금 다룰 줄 알았던 우기가 호스트 프로그래밍까지 한 것은 리눅스 덕.. 아니 더 나아가서는 source를 공개한 많은 해커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점이 확실하지요. source를 공개함으로써 많은 다름 통신인들이 이곳이 좀 이랬으면 하는 바램도 보낼 수가 있더군요. 한마디로 서로의 머리를 함께 맞대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리차드 스톨먼이 왜 해커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역설을 했는지 알수가 있더군요. 통신상에서 저는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원하는 일을 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본주의가 만연한 지금의 사회에서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지요.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통신상에 널려있고, 아직 사회모순의 때가 묻어있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도 알 수 있고, ...

공개 소프트웨어, 즉 FreeWare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를 뜻하는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싶으면 돈을 받고 싶다고 그래도 괜찮을 것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최대한의 정보공개는 있어야한다고 봐요. 내 관점에서는 소스지요.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전에 만들어놓은 Linked list라는 프로그래밍 기법같은 것을 쓰면서 이것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창작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다 노가다지요. 하하하..프로그래머에게 지불돼야하는 것은 노가다비용일뿐이예요. 온갖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발전시킨 정보를 자기 서랍 속에 꽁꽁 숨겨놓는 권리는 프로그래머에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는 책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권같은 의식이 별로 없었대요. 어떻게 하면 책을 복제해서 지식을 널리 알릴까 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책이라는 것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붙여서 지식의 보급이라는 차원보다는 지식의 빈부의 격차를 낳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전태일열사가 법전 하나를 사기 위해서 며칠 굶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렇지만 지금도 필요한 책을 사는 경우는 참드물잖아요. 거의 제본을 뜨지요.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정보들을 다 돈주고 샀다면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돈많은 사람들이나 그 많은 책들을 다 지돈내고 사지요. 그렇게되면 부모 잘 만나야 박사되겠지요. 황당하겠지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요.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다 산다면 내 컴퓨터는 억대의 금덩이가 될꺼예요. 불법복제라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가 적어도 책 가격만큼 떨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한글을 지금 정품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공연찮불법될왜 막지 못할까요? 마케팅전략도 있겠지만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현실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불법복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지요. 우리나라보다 더 소프트웨어기술이 발전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불법복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더합법적으로 프로그램복제를 하기 위해서 GNU같이 프리소프트웨어재단이 나타나는 것이구요.

계속 말이 헛나가고 있군요.

한마디로 제 말은 copyleft의 지지입니다. copyright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제도이며 프로그램 발전의 장애를 주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copyright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자본과 맞물려 결국은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프로그래밍도 전세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프로그램을 가져와 소스를 약간 바꾸어 상용화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copyright및 지적재산권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결국은 정보라는 것 자체가 정보약소국을 식민지화할 수 있는 큰 핵탄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먼저 만들어놓은 규약을 돈주지 않고는 쓸 수 없다는 것... 얼마나 황당합니까?

Copyright 이것은 전혀 미래가 아니라 수년후에 우리의 목을 조를 통상법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2.5. 통신연대 월례포럼

통신연대(참세상 go jinbo)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월례포럼을 열어 정보화사회의 첨예한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함으로써 정보통신운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함께 찾아가고자합니다. 월례포럼은 사전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며, 정보연대는 이를 SING A SONG에 정리하여 통신연대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그 성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5.1. 쌍방향미디어시대의 이용자운동 (김형준님[23])

■ 전통적 미디어에서 이용자운동(수용자운동)

매체는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오면서 함께 발전해왔다.보통 우리가 유통수단의 발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미디어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매체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그대표적인 예가 바로 근대혁명에서 신문이 한 역할이다. 사회적 변혁기에 신문은 대중을 선동하고 조직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모든 정치세력들이 사용하였다.

현대에 들어서서는 방송매체가 이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신문방송매체가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이에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크게 보면 세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대항매체운동이다. 말지를 시작으로 하여 한겨레,내일신문에 이어 미디어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과 과제를 던지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다.

다른 움직임은 수용자운동이다.신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수용자교육등 대중매체를 올바로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과 감시를 주되게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매체노동자들의 편집/편성권운동(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운동이건간에 매체의 특성상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일방적인보도를 전제로 사후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 말 그대로의 수용자운동 이상은 아닌 것이다. 사후적인 결과를 토대로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의 양식에 따라보도/편성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상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 뉴미디어와 구미디어에서 이용자운동의 차이

구미디어에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옴부즈만제도정도이다. 물론 이 제도는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본질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상은 아니다. 그것이 구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뉴미디어가 구미디어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용자들의 참여가매체의 특성상 자유롭고 가능하다는 점이다.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디어가갖고 있는 이용자운동 더하기 뉴미디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영역이 더해져또다른 이용자운동이라는 영역이 형성된다.

■ 이용자의 참여는 무조건 선인가?

신문의 경우 옴부즈만제도라는 형식으로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려고 시도하고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렇지만 기업에 의한 이용자참여의 이용은 공중파방송을보면 더욱더 치밀하고 상업적이다.

KBS1에서 토요일저녁에 방송하는 [심야토론]이나 SBS의 [60분의 선택](?)같은프로그램처럼 이용자참여를 환영하는 시사프로그램도 있고 오락프로그램에서 이런현상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23. 바른정보 대표

이렇듯 이용자참여는 대중매체에서 보편적인 흐름이다.

그렇지만 이용자참여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아니다. 이런 점은 매체특성상 쌍방향성이라고 일컬어 지는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PC통신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만들어놓은 공간에이용자가 뛰어노는 것일 뿐이다. 전통매체에 비해 뛰어놀 공간이 많을 뿐이지만...

(이점에서 인터네트와 PC통신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이든 인터네트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공간을만들 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예외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잣대는 바로 Control의 문제이면 제도적으로 자치라는개념이다.

■ 소비자이게끔 만드는 사업자

PC통신은 서비스인가 가상공동체인가?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용자로서의권한과 역할이 차이가 난다.(물론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다)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두가지예이다.

하나는 정보윤리위원회라는 법적기관을 통한 검열이다.어떤 사업자와 윤리위원회는 대립적인 면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여러가지 이유로 관행상 해왔다고 주장하는 사업자검열을 법적으로 외화한 것에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이용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과금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체납이용자들을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약관을 통해 PC통신을 사업가가 일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는 사람에게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PC통신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는 지위에 머무르고 소비자로서의 권한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소위전통매체가 누리던 편집/편성권을 뉴미디어사업자는 이용자활동의 허가와 검열이라는 형식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의 권리란 보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기위한 의견개진이상은아니다.

즉 왜 접속이 불량이나,이런 기능을 개선해달라,동호회를 늘려라,나우누리에 있는 서비스를 여기도 만들어 달라....(물론 바통모의 살기좋은 하이텔 만들기도 여기에 들어간다)

온통 열린게시판(소위 플라자난이나 제안난)을 뒤덮고 있는 글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러저런 형태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그외에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해 귀를 막고 있다. 사업자가 행사하는 권한에 이용자가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거의 없다.

■ 보다 많은 자치를 위한 이용자들의 요구

우리가 PC통신을 하나의 공동체라고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칙란 무언가의 기구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최소의 간섭과 최대의 보장이라는 원칙하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PC통신공간중에서 이용자들이 만들어가는 영역에 대해선 명확히 자치권을 주장할필요가 있다.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허가와 검열을 이용자가 찾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때 다음 두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 한다.

우선은 이용자에 의한 심의(검열) = 사업자에 의한 검열폐지

다음은 모임결성권의 이용자귀속.

물론 이것을 어떤 확보할 것인가, 비조직적이고 말이 많은 통신공간에서 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용자의 투쟁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또다른 관점에서의 이용자운동

지금까지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이용자운동을 바라보았다.우리사회처럼 상업적네트워크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특히 수용자/소비자입장에선 활동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PC통신이 이용자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에 이용자들이 어떤 공동체를만들어나갈 것인가라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통신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까를 생각해보자.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는 우리사회 모두의 공동재산이라는 사고의 확산이다.이런 뜻에 무른모뿐 아니라 다종다양한 - 통신상에서 유통되는 - 지적재산에 대해이용자운동으로서의 copyleft운동은 무척이나 소중하고 생각한다. 통신상의 글들이이제 하나의 개인재산으로 -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건에서상업적인 이해를 배제한 공유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사업자에 의한 지적재산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역할도 된다.

둘째는 사적인 공간이 상업적네트워크속에서 공공영역을 확보해내는 일이다.즉 Free Acess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Free Acess가 무료는 아니다)청와대에 편지를 보내기 위해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가입해야 하고 비영리단체인사회시민단체들의 글을 보기위해 추가요금을 내야 하고 행정기관정보를 유료로검색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부당한 일이다.

이유야 어찌했든 간에 공공적인 자산 모두가 상업화하는 길목에 있는 것이다.행정기관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단체정보조차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셋째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성,정치,지역감정을 어떤 이유로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것에서 선택적인 검열이란 있을 수 없다.

넷째 몇몇동호회에서 지속해오고 있는 말머리붙이기,토론문화세우기,한글쓰기등등은 캠페인으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통신이 통신이기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해본다. 통신이 배설의 수단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데 문제가 있다. 어떤 사업자가 게시판을 완벽하게 배설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상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의사소통에서 PC통신이 가지는 강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2.5.2. 전환의 좌표 토론과 김형준님의 의견

정보통신운동으로 가는 길(jinbo 3) [81/77]

제 목: [포럼]전환의 좌표토론과 저의 사족...

올린이: 김형준(smallake) 96.01.10 09:54:20 조회:6

하이텔 전환의 자표팀이 토론한 내용인데 개인적인 사족을 달아 올립니다. 물론 토론입니다.

지난주 [전환의 좌표] 모임에서는 김형준님의 <쌍방향 시대의 이용자 운동> 발제문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었는데 (짧은 토론을 짧게 정리합니다. 주관적인 견해가 어쩔수 없이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특별한 결론은 없구요, 이에 대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전제에 대하여 *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에 비해 이용자의 참여(쌍방향성)를 탁월하게 보장한다고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CATV를 제외한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이며, '쌍방향성'의 근거도 지금까지는 다소 당위적이다. "이용자의 참여가 매체의 특성상 자유롭다"는 전제부터 의심해보자.

- 지난주 <미디어 오늘>에 의하면 독일은 "지난 10년간 채널수는 1,000%로 늘어났지만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20%만 증가했다. 독일의 유료텔레비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프레미에레 반송국은 지난 5년간 한번도 백만 곡객의 선을 넘지 못했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어, 새매체 소비를 위한 시간확보에 부정적이다."

- 통신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하이퍼카드와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등이 동원되어 나날이 화려해질수록 정보의 생산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자본과 고급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로 좁아진다. 텍스트 개념의 PC통신이 사라질 머잖은 날에 있어서도 뉴미디어는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것인가? - CATV에 대한 연구가 좀더 필요함.

(의견)이용자의 참여는 몇가지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뉴미디어가 쌍방향적이다라는 것은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위의 예로 든 것이 토론된 내용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일부라고 하더라도 부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항은 미디어의 이용을 말할 때 기술지상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되었기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논자들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사용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말한 요점은 이용자참여라는 -우리의 경우 초보적인 단계로 그조차도 중요하지만 - 명제를 절대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참여라는개념은 이미 자본에 의해 상업화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구미디어든 뉴미디어든 이용자참여를 논할 때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멀티미디어시대의 쌍방향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것은 한가지예로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IGC에서 WWW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멀티미디어의 자본성을 지적하였고 쌍방향성 혹은 소통의 수단으로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Home Page를 만든 후에 사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같았습니다.

멀티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사상은 Human Interface입니다. 멀티미디어말로 가장 인간이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죠.이점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명령어방식보다는 GUI방식이 앞선 것이고 음성이나 다른 복합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전달과 이용은 자연스러운 추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HomePage를 개설하는 개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정보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정보의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는점에 동의합니다.그렇지만 그것이 이용자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이죠.

세번째로 익히 잘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는 통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 CATV에 대한 논의가 시민운동에서 활발한데 - 비디오캠코더의일반화와 더불어 비디오를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지만한국상황에서 가능한 논리일까하는 의문입니다.공공채널을 요구하고 -우리의 경우엔 기껏해야 상업채널내에서 공익성프로그램에 참여이상일 수 없지만 - 이를 제도화하려는 몇년간의 노력은 현재 좌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문제의식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의식이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미디어의 구축이라고 한다면 CATV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이용에 들어가는 개인적 비용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토대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과 실험입니다.이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PC통ㅇ신이외에는 아직 대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처럼 독립적인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나라에선.

* 이용자 운동에 대하여 *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참여는 수동적인 수용자 운동 이상의 것, 적극적인 곡세로서의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자치를 위한 이용자들의 우선적인 요구사항이

1. 이용자에 의한 심의(검열) = 사업자에 의한 검열폐지

2. 모임결성권의 이용자 귀속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좌표 회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실제 이용자에 의한 검열이란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영원히 ideal한 이야기는 아닌가? 는 의견으로부터 이용자에 의한 심의(검열)의 정당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실제적인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온 PC통신에 대한 환상 - PC통신은 무정부적인 공간이다/현실세계와 별개의 공간이다/그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 의 일환으로서 "이용자 자치"에 대해 냉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의견) 참여와 자치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그리고 자치란 제도적인 면도 있지만규범적인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조건에선 제도적인 것보다는 규범적인 것 - 이용자들이 사실상 인정하는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이 가능하지않을까 합니다. 하동연이 하이텔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인정을 못받는 상황에서 하이텔 이용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이 있고 그로부터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자치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사업자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자치가 아니라 이용자로부터 부여받는 것,그리고함께 하는 것이 자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하는 것은 조건과 사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열이 아닐까 합니다. 극단적인 반검열운동중의 하나로 삭제게시물 모음난을 만드는 것도 한방법이겠죠. 한국통신노조이 그러했던 것처럼.다만 이용자에게 도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일 중요한 시각 - 정보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공동재산이라는 사고는 틀림없이 같이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정보의 가치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가운데 commercial value부분은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댓가가 있어야 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copyleft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용의 측면도 생각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는 이용자의 부담으로부터 공공의 부담(국가)으로 가야 한다.

(의견) 저가 항상 주장하는 것중의 하나가 정보의 공유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극복한자는 것입니다. 정보의 공유라는 것이 국가소유 혹은 국유화 = 국가기기관에 의한 정보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국통신에서 하는 공공DB가 정보의 공유라는 사고에 출발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보 혹은 인류의 지적자산은 인류모두의 것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모두가 함께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보의 공유는 소유개념보다는 이용자운동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들 들어 대학원학생회에서 원생들의자발적인 참여로 졸업논문모음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정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의 지불이라는 측면은 논외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이전에이미 현실에선 기업에 의해 일정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때문이죠. 정보의 공유란 정보란 상품이 시장논리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 01410 유료화에 대하여 *

위와 같은 맥락의 연장에서 01410 유료화에 대해 연장된 토론을 다음 모임에서 하기로 함.

2.5.3. 1996년 1월 13일 통신연대 첫 월례포럼 보고 (게시판지기 장여경님)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나다순입니다.
*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참세상 아이디입니다.

alternative CUG : 오순영(나우:완이네)님, 이혁수(jjournal)님 // 노동연구포럼 : 황승하(nowlabor)님 //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 기영삼(물끄럼)님, 허태영(k2barun)님 // 정보연대 SING : 안유석(simulasi)님, 오병일(아이돌)님, 황규만(나우 : hwangkm)님 // 진청이네 : 오용호(jinyouth)님 // 찬우물 : 박소정(nowcw)님, 박수진(나우:hkjass)님, 이종석(nowcw)님, 홍성균(통일구오)님, // 참세상 : 김형준(smallake)님 // 청년정보문화센타 : 박준호(참세상:통일이여)님 // 현철동 : 김바로(zspt)님, 김영선(anaki)님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96년을 여는 첫 모임이 무엇보다 서로 에게 반가운 자리였기에 더욱 기쁩니다.단체 여러분,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셨던 한분한분, 소망하셨던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주제토론

월례포럼은 공지해드린 대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참세상의 김형준님께서 "쌍방향시대의 이용자 운동"에 대한 발제를 하셨습니다. (발제문 : jinbo 3번 게시판 - 68번) 곧바로 이어 바통모의 허태영님께서 이용자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하이텔 새로 만들기"에 대한 소개와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주셨습니다.상업통신망에 있어서 이용자 운동으로의 '이용자 가치'의 필요성, 정보는 우리 사회 공동의 재산이라는 취지에서 바라보는 copyleft운동에 대한 질의 등 토론은 김형준님의 발제에 근거하여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 포럼에 따로 서기를 하지 않았기에 자세한 토론 과정은 생략합니다. 앞으로는 포럼 토론과정에 대한 온라인 기록이 필요할 것 같군요.
* 무엇보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들, 그리고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활발히 나누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적극 활용합시다!

■ 01410 유료화 반대

월례포럼의 말미에 '01410 부당요금 부과 무효화 추진 범통신인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오신 단체분들께 '01410..대책회의'에서 결의한사항과 제시한 대안 등 진행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이번 01410 유료화와 그에 대한 이용자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01410...대책회의'에 이미 참여하고 계신 단체를 포함하여 통신연대의모든 단체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한 단체 여러분의 건투를 바랍니다.

■ 2월 월례포럼

2월 월례포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발제자 섭외가 완료되는 대로 시간과 장소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때 : 1996년 2월 11일 일요일 (되도록 오전 : 시간 다시 공지)
* 곳 : (장소 다시 공지)
* 예정 주제 : 뉴미디어 운동
* 섭외 중인 발제자 : 김명준님 (노동자뉴스단 대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화두, '정보통신운동'을 한달에 한번 있는 월례포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 공유하고 구체화하여 역사를 열어젖히는 우리의 전진과 투쟁에 힘을 더합시다.

2.6. 소설 [Login] 서평 (글쓴이 : 전주용)

소설 '로그인'은 책을 펴보기 전에 시선을 끄는 점들이 많다.
'창작과 비평'에서 펴낸 '과학소설' 이라는 것, 작가가 직업적 작가가아닌,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라는 것등의 소설 외적인 요소가 일단은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지만 이 책을 그러한 배경이 없이도 충분히 하나의 작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미덕은 '재미'다. 읽어나가면서 전혀 지루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특히, 실험실 생활의 묘사라던가, 휴즈의호스트 컴퓨터에 해킹해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결말부분같은 부분부분의 묘사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 한 느낌을 주고, 기술적인 부분의 묘사가작가 본인이 '공돌이'인 탓에 충분히 바탕이 되어있어서, 외국의 작품과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느껴진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그 부분으로 몰입되거나 두리뭉실 넘어가는 일이 '별로'없이 (딱 하나, 해킹부분은 역시 두리뭉실 넘어가버린다. 이건 모르면 '못'쓰고 알아도 '안'써야 하는 얘기긴 하지만.. ^^;) 적절한 수준에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뤄주고 있는점도 꽉 인상적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척 방대하고 그렇게 녹녹하지만은 않은 주제들이다. 독자적 과학기술 개발능력의 정립, 문민정부에서의 노동탄압, 봉건적인 대학원 구조, 학생운동, 80년대와90년대세대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이야기... 그 하나하나나 그만큼의 독립된이야기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이다. 자신의 첫 장편에 대한 작가의 욕심이었을까?
그런 탓인지 이야기 전개상 가끔은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고, 가끔은상투적이기도 한 부분도 있다.
(특히, 중간에 갑자기 삽입된 GNU선언문과 Copyleft에 관한 얘기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단면을 나타내고자 하는 저자의 욕심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라고 보인다. 그리고 철윤의 귀향은 왠지 그 옛날의 일제시대의 소설을 보는듯한 느낌이든다.)
더구나, 소설속에서 지은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느끼기엔 주제 자체가 그렇게 연관성이 없고, (물론 만병 통치약으로 80년대에 쓰여지던 **의 모순 따위의 해설도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주제를 하나 하나 느끼기 보다는 빠른 소설의 템포와 부분부분 나타나는현란한 묘사에 더욱 시선이 가게되기 때문에 이 소설의 장점인 이러한 것들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점하게 하는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처음 소설을 내는, 그것도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소재와 주제를다루는, 전업작가도 아닌 과학기술자에게 이 모든 주제를 다루면서 그런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지나친 부탁일지도 모른다.
이 소설의 작가는 우리나라같이 반쪽인간을 양산하는데 혈안이 된 교육환경 속에서, 실제로 자기 이야기를 할줄 아는 몇 안되는 과학기술자이다. 그에게 이렇게 많은 기대를 거는 것도, 하고싶은 말이 있지만 어느새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수많은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무튼 오랫만에 맘에 드는 소설을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 나 또한 흔히 말하는 '공돌이'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에, 남다른 감회가 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 추천할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2.7. 사회단체 메일링 리스트 개통 공지

정보연대에서 사회단체 메일링 리스트를 개통합니다. 이 메일링 리스트를 각 사회단체의 통신담당자 분들께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각 사회단체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있고, 통신망을 통해서 혹은 인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만,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일상적인 정보교환과 연대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자본의 전 세계적인 확장에 맞서는 사회운동단체들의 연대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요건은 인터넷 계정을 갖고있어야 한다는 한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각 통신망에서 인터넷 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통신망에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겠죠.)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4].
list@sing.sing로 메일을 보내어 body(본문)에 subscribe ngo를 써주시면 됩니다.

메일링리스트에 관련된 몇가지 명령어는 역시 list@mail.sing-kr.org에메일을 보내어 body에 help라고 치시면 됩니다.

(제목은 어떻게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에를 들면, 가입해지 : unsubscribe ngo, 메일링리스트에 가입된 사람 조회 : who ngo 등 입니다..

아래에 help를 했을 때, 오는 답장의 내용을 싣습니다.

많은 분들의 가입 바랍니다.

Date: Mon, 29 Jan 1996 00:38:28 +0900

To: idle@nuri.net

Subject: Majordomo results

Reply-To: major@superbear.snu.ac.kr

>>>> help

This is Brent Chapman's "Majordomo" mailing list manager, version 1.93.

In the description below items contained in []'s are optional. When

providing the item, do not include the []'s around it.

It understands the following commands:

subscribe <list> [<address>]

Subscribe yourself (or <address> if specified) to the named <list>.

unsubscribe <list> [<address>]

Unsubscribe yourself (or <address> if specified) from the named <list>.

get <list> <filename>

Get a file related to <list>.

index <list>

Return an index of files you can "get" for <list>.

which [<address>]

Find out which lists you (or <address> if specified) are on.

who <list>

Find out who is on the named <list>.

info <list>

Retrieve the general introductory information for the named <list>.

lists

Show the lists served by this Majordomo server.

help

Retrieve this message.

end

Stop processing commands (useful if your mailer adds a signature).

Commands should be sent in the body of an email message to

"list@mail.sing-kr.org".

Commands in the "Subject:" line NOT processed.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problems, please contact

"major-owner@superbear.snu.ac.kr".

>>>>

24. 글을 편집하면서, 도메인네임등을 고쳤습니다.

3. Vol. 1 #2

3.1. 편집자의 변 116

3.2. 정보연대 활동점검과 이후 활동방향 116

3.3. Copyleft운동을 제안하며 118

3.4. 메일링리스트 사용에 관해 120

3.5. 통신연대 월례포럼 124

3.5.3. 뉴미디어와 사회운동 126

3.6. 서울대 공대새터 강연 132

3.6.1. 총평 132

3.6.2. 강연문 : 너희가 정보를 믿느냐? 132

3.6.3. 강연 감상글 137

3.7. [여성과 사회] 기고글 : 인터넷상의 여성정보 (이혁) 139

3.1. 편집자의 변

한 친구가 있었다. 지난해 여름 그 친구는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떠났고 올 가을 돌아올 예정이다. 약속대로 편지가 왔다. 편지의 내용은 추수감사절 전의 것이었지만, 내가 그 편지를 실제 받은 것은 33번의 보신각 종소리를 들은 훨씬 후다. 그 친구의 게으름과 연말연시의 우편물의 폭주로 인한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어쩌되었건 나는 답장을 보냈고 부디 친구의 20살 생일 전에는 배달되었으면 하고 바랬다. 내 편지는 다행히 그 하루전에 배달이 되었고 "너무 기뻐 눈물이 다 나고 아이처럼 자랑도 하였다고 그러나 막상 글을 읽어 보니 너무 웃겼다(?)고..." 정말 울먹울먹할 것 같은 목소리의 음성메시지가 내 호출기에 남겨졌다. 그리고는 이런 말도 하였다. "친구가 인터넷을 하니까 내가 곧 E-Mail을 보낼께...기다려..."

나의 답장에는 나의 E-Mail 주소가 실려있었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발빠른 대응을 보일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꿈꾸었다. 이것은 동시에 바로 인터넷이 운동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단체(NGO)용 메일링리스트가 정보연대 SING에 의해 개설되었고 정보연대의 메일링리스트도 공개되었다. 인터넷의 E-Mail 서비스를 이용한 이러한메일링리스트들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SING a SONG Vol.1 #2호에서는 이런 메일링 리스트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도 나는 내 메일함을 가득채울 수많은 메일들을 갈망한다. 손수 또박또박 쓴 글씨의 편지가 주는 감동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혹자는 기계적이라고, 차갑다고 말할 지도 모를 전자메일 속에서도 오늘 나는 무언가 따뜻함을 찾아 헤메이고 있다. 기다릴께...

3.2. 정보연대 활동점검과 이후 활동방향 (이 혁)

■ 들어가며...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월말부터 8월말까지 정보연대 대표를 맡게된 이혁입니다. 맡게 된 책임의 무게가 벌써부터 저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연대의 한달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3월 1일까지 웹페이지(http://superbear.snu.ac.kr/)를 올리기로 한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서버구축문제로 활동이 많아지다보니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보연대 웹페이지는 앞으로 자주 갱신하여 네티켓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활동점검

- 서버구축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란 회사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인터넷 전용선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메인 네임 등록, 시스템 구축등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cybercom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이름.cybercom.co.kr' 이렇게 정해지겠죠. 서버구축에는김상영씨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버관리팀을 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전에 존재하던 웹기획팀을 다시 새롭게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컴활

컴활기획서가 나왔습니다. 참세상에서 'go jinbo 24'를 하지면 컴활관련게시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된 컴활 기획서가 올라 갈 것같습니다. 노동이론정책연구소와 연락이 되었고, 거기서도 비슷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5-6월로 잡고 있고 통신연대 모임에 25일날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컴퓨터 구축상황, 필요한 교육,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는 설문지를 이번주 내로 배포하여 컴활 추진의 자료를 삼기로

했습니다.

-사회단체 웹페이지 구축

민주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웹서버구축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주 일요일에 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달 초까지 정보연대의 브로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Korea Progressive Directory'를 알리기 위한 브로셔와제안서 작업을 이달에 할 예정입니다. 웹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힘든 것은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영문번역을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인터넷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 SING A SONG

매달초에 내기로 한 온라인잡지 'Sing A Song'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이번호는 3월 11일이 되어서야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의 의도는 활동상에서 나오는 글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생각이었으나, 잘만들려고 하니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드리면서, 다음호부터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교협 워크샵참가

3월 28일 서울대에서 개최되는 민교협 워크샵 문화제국주의와 정보민주주의(미정) 에 참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참가방식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아마 실제적인 인터넷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젠테이션을 하게 될 것같습니다. 이번주에 다시 한 번 더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 자치도서관

현재 서울대학교 자치도서관을 추진하고 계신 이범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치도서관 프로젝트는 기술팀이 맡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활동 방법이없어서 구심점을 못찾던 기술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Social Science Network

현재 구체적인 추진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회과학 서적출판사, 사회과학서점, 사회과학을 전공하거나 관심있는 분들을 웹, DB, 메일링리스트등으로 묶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입니다.

온라인으로 사회과학서점의 도서현황을 알 수 있고 주문까지 할 수 있도록하고,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관련 주제를 토론하며, 서점에서는 Copyleft로 이미 절판된 책이나, 저자와 협의하여 공개가능한 글은 웹상으로 볼 수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일링리스트로 사회과학 전공하시는분들의 논문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mailing list

현재 'superbear.snu.ac.kr 에서 돌아가고 있는 리스트는 sing, ngo, ic가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를 필요로 하는 단체나 모임에게는 만들어 드립니다[25].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sing메일링 리스트는 공개되었습니다. sing의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은 지금 'subscirbe'하십시오. ngo메일링 리스트는 현재 한국의 사회단체의 네트워크 통로로 생각하여 만든 것입니다.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링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는 부분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 나오며...

통신검열법이 지금 미국을 휩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정리해야 하나, 일에 쌓여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윤리규정과 정보공개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곧 닥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정보연대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25. 현재는 메일링 리스트가 mail.sing-kr.org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3.3. Copyleft운동을 제안하며 (글쓴이 : 황규만)

■ 들어가며

1969년 초, 군사 목적으로 정보의 안전을 위해 DATA를 여러 곳에 분산 시키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계기로 역사에 등장한 인터넷을 1972년 공개되면서 거대한 컴퓨터를 갖고 있던 대학과 정부 기관을 연결시키며 성장해 왔다. 주지 하듯이 인터넷에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성장해왔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컴퓨터 네트워크는 그만한 네트워크망과 컴퓨터를 보유한 대학또는 공공 기관 사이의 순수 정보 공유 목적을 위해 성장해 왔으며 주로 대학생 및 학자사이에 유통되던 정보망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 뿐만 국가 네트워크망은 풍요한 미래사회, 장미빛사이버 스페이스로의 이행, 유토피아의 실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혁명으로 이룩될 미래의 정보화 사회가 인간이 그토록오랬동안 꿈꾸어 오던 이상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암흑 시대로 이끌어 갈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18C 증기 기관이 발명되었을 때만 해도 그것으로 인해 수천만의 억압받는노동자가 탄생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며, 20C 초 아인슈타인이상대성 이론을 증명했을때만 해도 그는 인류가 멸종이라는 공포속에서 살게되리라그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불확실한 시기에 직면했다. 그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도 그러하고 또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에게도 그렇다.

그렇다면 왜 필자는 Copyleft에 대하여 말하려 하는가? 또 무엇을 말할 수있을까? 오직 과정속에서만 들어날 뿐이다.

Copyleft는 지난 GNU project 과정 속에서 제기되었음을 상기하자.

> "You never have to pay anyone licence fees to use GNU software, and you always have the freedom to make your copy from a friend's computerat no charge"

윗 글의 혁명성은 상당하다. 또한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뿐만 아니라이 문제를 앞으로의 글속에서 통신망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 싶다.통신망 자체가 갖는 혁명성과 현재성이 지니는 그것의 한계들, 또 세계 통신망 전쟁에 있어서의 자본운동의 맥락에서, 그것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Copyleft가 지니는 역사적 과정과 역사적/현재적 함의를 소박하고 개인적인수준에서 집어나갈수 있었으면 한다.

■ 통신의 혁명성: 일방소통과 상업주의의 극복

인류는 참으로 오랜 삶을 버텨왔다. 문자가 없었던 Oral시대를 거쳐 처음으로 인쇄가 이루어졌던 문자시대(Literature age)와 20C 인쇄시대(Mass a-ge)를 겪었다.

문자는 인류 지식체계 전수라는 절대 절명의 과제를 수행했다. 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자는 그것을 접근할수 있는 계급과 접근불가능한 계급간의재생산이라는 또다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20C 인류는 교육혁명을 겪었다.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영화관에서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예술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인류는 들떠 있었다. 대량 생산되는 훌륭한 문학작품과 영화, 또 대중음악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고 믿었다. 모든 인류를 계몽할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1950년대 초반 하우저는 현대를 영화의 시대로 선언한 적이 있다. 그것은 영화가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며 그만큼 예술 민주화에 가까이 가 있는 장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박상강(朴常隆)의 '죽음에의 한 연구(硏究)'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제는 <My new parter>를 모른채 <투캅스>의 독창성을 평가하는 논의에 끼어들 수 없으며, 포르노그라피의 역사적 두께에 문외한으로서는 <너에게 나를 보낸다>에 대한 장선우 감독의 변명성 선언을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그정도는 낫다. 타르코프스키의 '노스텔지어'를 몇 명이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 그 뿐이랴, 서태지를 들으면서도 외국 그룹의 음악을 모르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대중을 앞세우는대중문화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대중으로 분리되어 매니아 귀족주의가 등장한지 오래다. 여전히 대중은 상업주의 전략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체.

그것의 오로지 Copyright의 권리를 지닌 지식인층 그룹과 상업자본의 일방통행식 소통방식에 기인한다. 즉 여전히 지식은 대중을 계몽할 대상으로 파악하며 지식의 소통은 자본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기때문인 것이다.

-계몽주의와 상업주의의 적절한 만남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신망은 고급예술과 저급 문화환경의 경계를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제한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금박 입힌 억압을 깨고, 문화계의 기생적인 제사장과 문화병자들을 제쳐버리고,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에 의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평등의 예술을 건설할 수 있는 소통 매체를 가지게되었다.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강제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적 리얼리즘이 아니라, 반위계적이고 현실감각 있는 컴퓨터 낙서이다.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예술의 가능성을 내제한 것이다.

신문의 사설이 아니라 글과 글들이 꼬리를 문 바로 우리의 토론이 우리의가치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01410문제를 보아라, 어느 신문지상에 이보다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 것인가? 높으신 학자와 정부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의해 지식/가치의 체계가 이루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지식의 소유권은 이제 끌어내려져야 한다.

과거 진보진영의 학습체계가 대학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에 의한 것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들은 Marxism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였던 것이다. 지식의 소통을 우리 스스로에게로 끌어내리자. 이것은 전정무한대 소통을 전제로한다. 나의 글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보석처럼 빛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지식이 나만의 것이 아니듯 나의 창조물도 더 이상 나에게만 머물고 있지 않고 그것에 풍부히 덧붙여진 모습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자. 심지어 값싸고 잡다하며 불결하기까지 한 것 까지도.....

Copyleft는 단순한 복사의 무한대만을 보증하는 수식어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